대전발전연구원 발전계획

2006. 12

목차

I. 서론 1

1. 배경 1

2. 목적 1

3. 방법 3

II. 현황 분석 5

1. 정책 환경 5

2. 연구원 현황 7

3. SWOT 분석 10

III. 발전 전략 11

1. 비전 12

2. 시스템 13

3. 네트워크 14

IV. 부문별 계획 17

1. 조직체계 17

- 연구조직 17
- 행정조직 22
- 충원 24
- 부설기구 운영 26

2. 연구수행 27

- 연구과제 선정기준 및 절차 개선 27
- 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29

■ 정책과제 및 현안 과제 활성화 31
■ 위임전결 규정 개선 32
■ 출장 34
■ 회의수당 지급기준 개선 37
■ 내부수익금 및 연구장려금(인센티브)산정방식 개선 38
■ 위탁관련규정 마련 40
■ 업무추진비 집행 40
■ 위촉연구원 제도 41
■ 보고서 인쇄 42
■ 연구원의 전문성 강화 42
■ 연구워크숍 활용을 통한 연구능력 향상 43
■ 연구인력의 충원 45
■ 연구실 공간 46
■ 연구원의 자기개발 지원 47
■ 안식년제 및 안식월제 도입 48

3. 인사관리 49

■ 신규채용 49
■ 승진 52
■ 임용 및 정년제도 53
■ 양적 평가 54
■ 질적 평가 57
■ 근무 평가 59
■ 경력환산 62

4. 협력네트워크 64
■ 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축 64
■ 지역 현안 정책연구원의 구심역할 강화 66
■ 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사업 추진 68
5. 고객서비스 70
■ 고객지원시스템 개선 70
■ 연구결과물 공유 및 홍보 시스템 강화 71
■ 정보관리시스템 개선 74
V. 재정계획 76
■ 기금조성 76
■ 예산절감 77

I. 서론

1. 배경

○ 급속히 변하는 지식기반사회의 정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연구원의 발전 계획이 필요하다.

- 정책의 형성 과정이 전문지식화 되면서 정책 연구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 전문적인 정책 지식과 아이디어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싱크탱크로서 정책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 지역의 싱크탱크로서 연구원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의 재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경영평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그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2. 목적

○ 지식기반사회의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원의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한다.

- 연구원의 비전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발전 전략을 개발한다.

- 연구원의 단계적인 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인 발전 로드맵을 설계한다.

○ 대전의 도시 규모에 적정한 정책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 인력을 확충하고, 조직의 유연성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 대전 지역의 변화된 정책 환경에 적합하게 연구원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한다.

- 연구원의 기획력 및 연구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여 연구원 조직의 사업 추진 역량을 제고한다.
-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조직을 확대·개편하여 글로벌 연구 역량을 강화한다.
- 연구 성과 및 자료실(홈페이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역 연구의 허브로서 연구원의 기능을 강화한다.

○ 연구원의 동기 부여 및 안정된 연구 수행을 위해 연구원의 복지 여건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 연수 및 특별휴가 제도를 운영하여 개별 연구원이 재충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3. 범위 및 방법

○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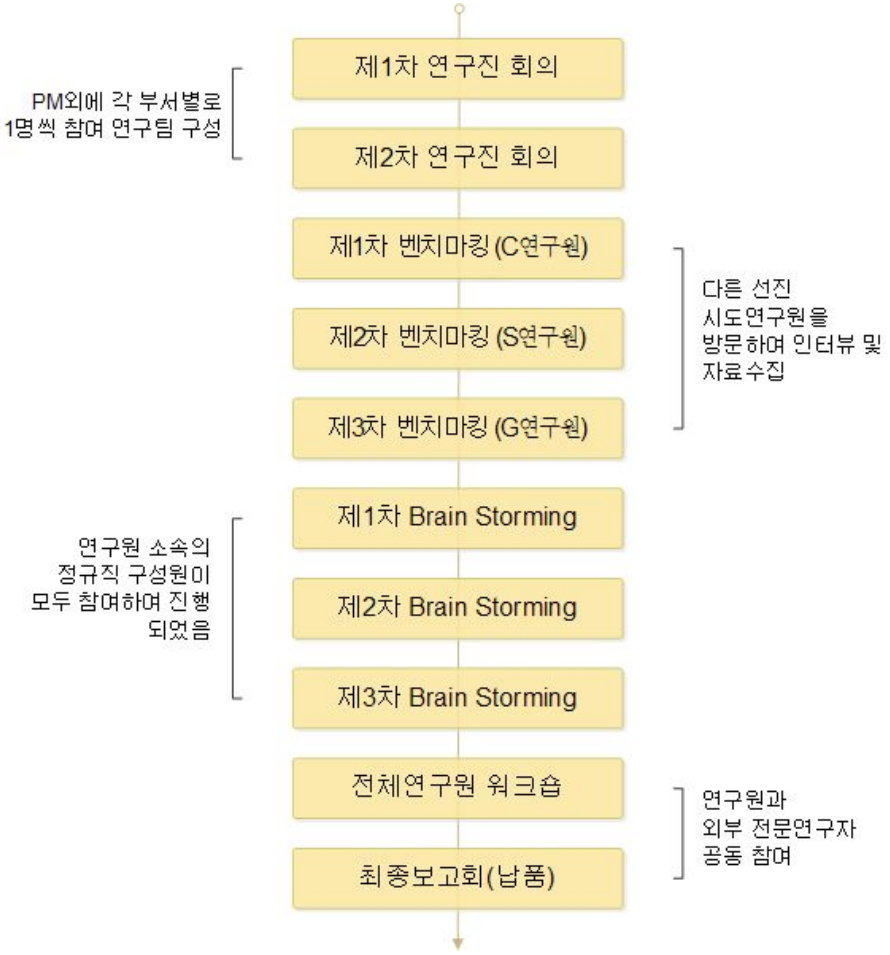
- 목표연도 : 2011년

- 비전 설정 및 실천적인 발전 방안 제시

○ 수립기간

- 2006월9월1일~2007년12월30일

○ 연구추진도



○ 추진일정

일정 / 추진사업	9월	10월	10월	10월	11월	11월	11월	12월	12월	12월
1차 연구진회의										
2차 연구진회의										
C지역연구원방문										
S지역연구원방문										
G지역연구원방문										
1차 전체연구원회의										
3차 연구진회의										
1차 부장회의										
2차 전체연구원회의										
3차 전체연구원회의										
전체연구원워크샵										
최종보고회										
최종보고서										

○ 방법

- 문헌 자료 및 타 시도 연구원의 사례 분석
- 전문가 자문 및 전체 연구원의 의견 수렴
- 시민, 전문가, 공무원 설문조사

○ 연구팀 구성

◦ 연구책임자 정선기(책임연구원)

◦ 공동연구자 황혜란(책임연구원)

임수빈(책임연구원)

이재영(책임연구원)

II. 현황 분석

1. 정책 환경

■ 사회 환경의 변화

○ 지식정보기반의 강화로 사회 각 분야의 네트워크가 심화되고,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전반적으로 변하고 있다.

- 지식기반사회의 환경에 적응하고 변화를 창출하기 위해서 지역 차원의 '학습 공동체'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강조되고 있다.

○ 권위적인 전통적 위계서열이 파괴되고, 새로운 가치와 선택의 다양성이 확장되면서 민주적인 생활양식이 파급되고 있다.

- 탈권위주의화와 더불어 시민사회가 활성화되고, 향후 참여를 통해서 생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 환경 및 생명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환경과 생명의 보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더욱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예측된다.

○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주 5일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의 생활양식이 변하고, 여가 및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다.

- 여성의 사회 참여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가부장적 전통하에서 제한되어 왔던 여성의 사회 참여가 점차 확대·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사회적으로 출산력이 저하되어 연령별 인구 구성이 변하고,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해 인구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 지구화·개방화가 진전됨에 따라 탈북자, 외국인 노동자 등이 유입되어 인종적·민족적 다양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국내

소수자의 수는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 인구 구성의 변화, 가속화된 글로벌화, 노동시장의 무국경화, 여성 및 장애인을 위한 적극적 고용 정책의 시행 등으로 노동력의 다원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역 환경의 변화

○ 앞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방 분권 및 분산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중앙정부 권한 이양은 지속적으로 추진·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대전은 수도권을 제외한 어느 도시보다도 인구 유입률이 높은 지역으로 향후에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20년에는 200만에 이르는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조성되면 대전은 그 배후도시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갖추지 못한 교육·문화 향유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배후도시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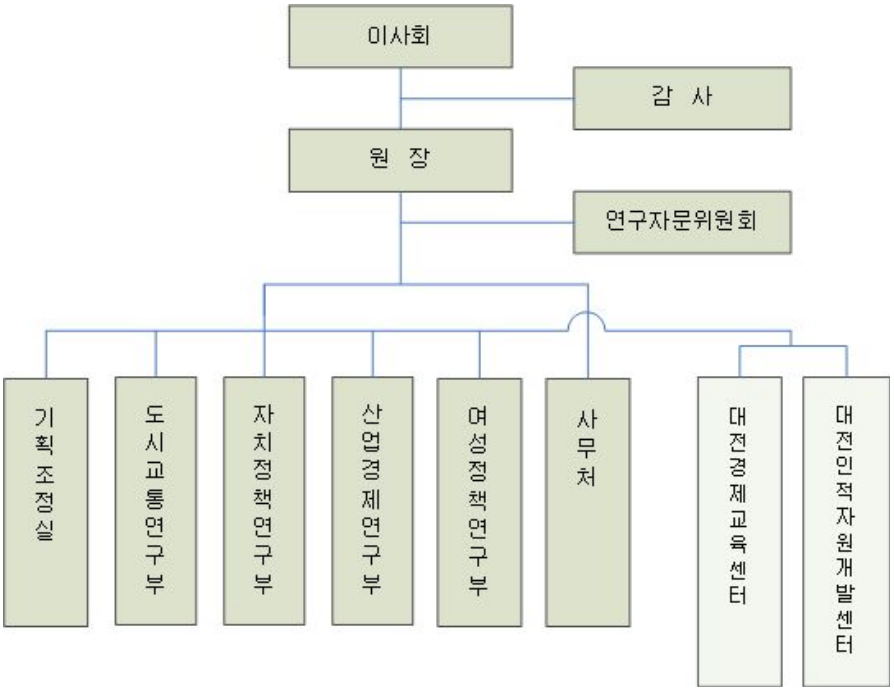
○ '대덕연구개발특구법'이 제정됨에 따라 대전은 국내 및 동북아 R&D 거점도시로 발전하게 될 전망이며, 2004년 3.6조원의 대덕연구단지 매출액이 2009년에는 6조원에 이르게 되고, 벤처기업은 1,300여개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 대전은 다수의 ETRI를 비롯한 세계적 수준의 유수한 연구기관들 외에도 충남대와 'KAIST'를 포함한 다수의 대학들이 밀집되어 있어 향후 우리나라(동북아) 핵심 인력 양성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 지역 차원에서 지자체간 제도 및 정책의 상생협력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행정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광역권 공동 협력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2. 연구원 현황

조직



※ 대전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사업 운영

인력

구분	계	원장	연 구 직			관 리 직						
			소계	선 임 연구위원	연구위원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정 원	25	1	18	4	14	6	1	1	1	2	1	0
현 원	19	1	13	2	11	6	1	1	1	0	1	2
과부족	△6	-	△5	△2	△3	-	-	-	-	△2	-	2

연구실적

(단위: 건, 종)

구 분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비 고
계	103	99	71	42	30	11	
기본과제	18	15	14	11	13	4	
용역과제	24 (6)	25 (7)	17 (6)	11 (2)	7 (0)	-	( )는 전년도 계속과제
보조금사업	4	6	6	3	1	-	
정책과제	7	11	13	-	-	4	
세미나행사등	25	27	9	11	6	1	
자문회의	23	14	11	5	-	-	
간 행 물	2	1	1	1	3	2	

예산 (2007)

세 입 (단위:천원)			세 출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비율(%)	구 분	예산액	비율(%)
합 계	2,921,818	100.0	합 계	2,921,818	100.0
용역사업	800,000	17.1	인건비	1,218,244	41.7
보조금사업	500,000	10.3	일반운영비	124,548	4.3
시 전입금	1,954,000	66.8	여비	20,265	0.7
이자수입	36,720	1.3	업무추진비	123,520	4.2
법인세환급금	6,098	0.2	자산및물품취득비	53,690	1.8
이월금	125,000	4.3	부담금	207,064	7.1
			연구과제수행비	796,000	27.2
			보조금사업비	300,000	10.3
			연구조성사업비	64,000	2.2
			예비비	14,487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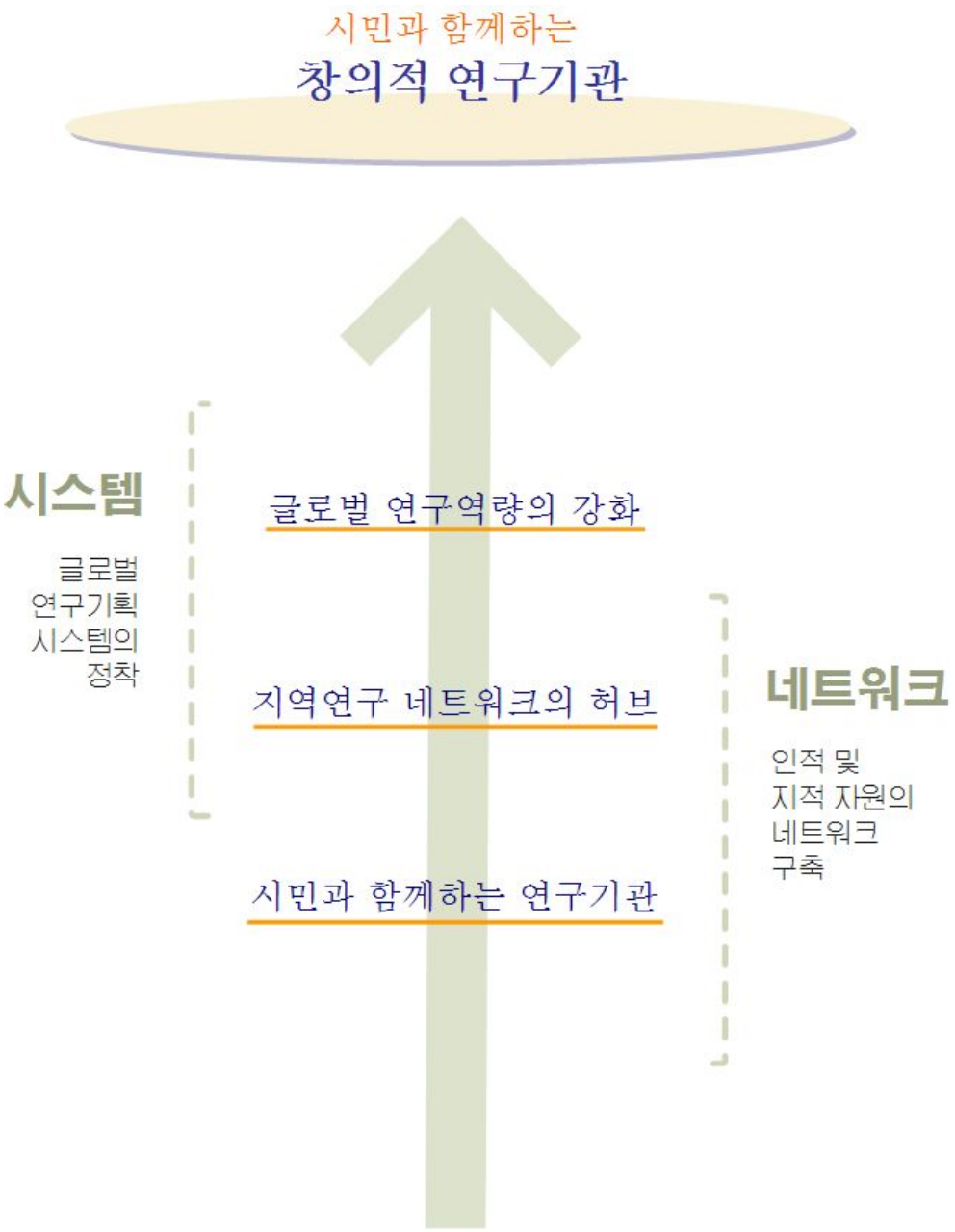
기금 (9억원)

출 연 금 내 역	기 금 관 리
◦ 대전광역시 1억원 ◦ 하나은행 5억원 ◦ 개발위원회 1억원 ◦ 자체조성 2억원	◦ 하나은행 적기적금 - 금액 : 7억원('06.9.26-'07.9.26, 연리 5.0%) - 금액 : 2억원('06.12.1-'07.12.1, 연리 4.8%)

3. SWOT 분석

외부환경 / 내부체계	기회(O)	위협(T)
	◦ 대전의 우수한 지식기반 잠재력 ◦ 지방 분권 및 분산화 정책의 시행 ◦ 광역 충청권 상생협력 활성화 ◦ 시민사회 및 시민참여의 활성화	◦ 인적・물적 자원의 수도권 집중 ◦ 인근 지역에 '세종' 도시 조성 ◦ 점차 심화되는 지역간 경쟁 ◦ 취약한 지자체의 예산 지원
강점(S)	S-O (활용)	S-T (맞섬)
◦ 지자체의 적극적인 연구 지원 ◦ 업무담당자와 긴밀한 협력관계 ◦ 유연한 내부 의사소통 시스템 ◦ 연구원의 강한 공동체적 유대감	◦ 과제 중심의 탄력적인 공동 연구 시스템을 운용하여 증대하는 지역의 정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 체계를 구축	◦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연구 테마를 의욕적으로 개발・수행하여 적극적으로 지자체의 지원을 유인
약점(W)	W-O (탐구)	W-T (회피)
◦ 소규모 예산 및 조직 운영 ◦ 취약한 대외 홍보 및 교섭 시스템 ◦ 미흡한 지역연구 허브 기능 ◦ 시의회 및 시민사회와 약한 연대	◦ 연구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지역 홍보・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 의회, 언론, 연구자 들이 함께 호흡하는 네트워크 중심의 연구원을 운영	◦ 인근 충청권 연구원 및 전문가와 긴밀한 공동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소수 연구 인력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연구원 시스템을 구축・운영

III. 발전전략


시민과 함께하는
창의적 연구기관
시스템
글로벌
연구기획
시스템의
정착
글로벌 연구역량의 강화
지역연구 네트워크의 허브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기관
네트워크
인적 및
지적 자원의
네트워크
구축

1. 비전

■ 시민과 함께하는 창의적 연구기관

○ 대전발전연구원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창의적인 정책연구기관'을 지향한다.

○ 대전발전연구원은 체계적인 과학적 연구 방법에 기초해서 정책 형성 과정에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 및 목소리가 담겨질 수 있도록 운영되는 시민 중심의 정책연구기관을 지향한다.

○ 대전발전연구원은 수요자 중심의 연구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과 함께 호흡·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적실성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 대전발전연구원은 일련의 정책 조언, 제안, 평가, 감시 등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정책 형성의 편향성과 독점을 방지하는 민주적인 정책형성 절차를 준수한다.

○ 대전발전연구원은 지역의 종합정책연구기관으로서 수시로 시의회와 '간담회', '연찬회' 등의 소통 통로를 마련하여 시의회와 연구원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연구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연구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을 담당하는 언론과의 유연한 협력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 시민사회가 활성화되고, 시민단체의 사회적 비중·영향력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이나 NGO와 원활한 소통 통로를 마련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는 것이 중요하다.

2. 시스템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

○ 급속하게 변화하는 지식기반사회의 정책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원의 내부 연구 역량을 혁신적으로 강화하고 조직의 유연성을 제고한다.

○ 각 분야간 긴밀한 협업 및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여 주어진 연구 인력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연구 시스템을 구축한다.

○ 글로벌 차원의 전략적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우수한 연구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인하여 국제화 도시 대전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연구 시스템을 구축한다.

○ 국제 통상을 포함한 첨단 산업 관련 분야 연구 인력을 강화하여 동북아 과학기술의 허브도시로서 대전의 도시 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 개발 시스템을 구축한다.

○ 연구원의 각종 연구가 시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수요자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연구원의 과제 관리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선한다.

지역 연구의 허브 기능 강화

○ 지역관련 연구 성과에 대한 외부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계속해서 새롭게 생성되는 연구원의 지역관련 기초 자료들을 지역 연구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 소통 시스템을 구축한다.

○ 연구원의 자료실 및 홈페이지 운영을 개선하여 지역 연구 관련 기초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역연구 협력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 시의회, 지자체, 기초단체, 유관기관, 연구자, 전문가, 언론, 시민단체

등과 정보교류 및 정책개발의 교감을 확대하여 지역연구의 허브 기능을 강화한다.

○ 지역민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 포럼, 워크샵,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주민과 함께 현안 과제 발굴 및 정책 대안 개발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3. 네트워크

■ 공동 협력 연구 네트워크 구축

○ 지역 연구를 위한 과제 발굴 및 연구 사업 수행과 관련해서 지역 연구자들의 유기적인 공동 협력이 가능하도록 대학을 포함한 지역의 각종 유관 단체의 인재풀을 구축·운영한다.

○ 충청권의 정책 연구원, 대학 등 각종 전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여 지역의 시급한 공동 현안에 대한 협력 연구 등 필요한 사업을 발굴·시행한다.

○ 국내 및 해외 Visiting Fellowship 등 상호 인적 교류 사업을 활성화하여 연구원들이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갖고 연구역량을 재충전 할 수 있도록 한다.

■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연구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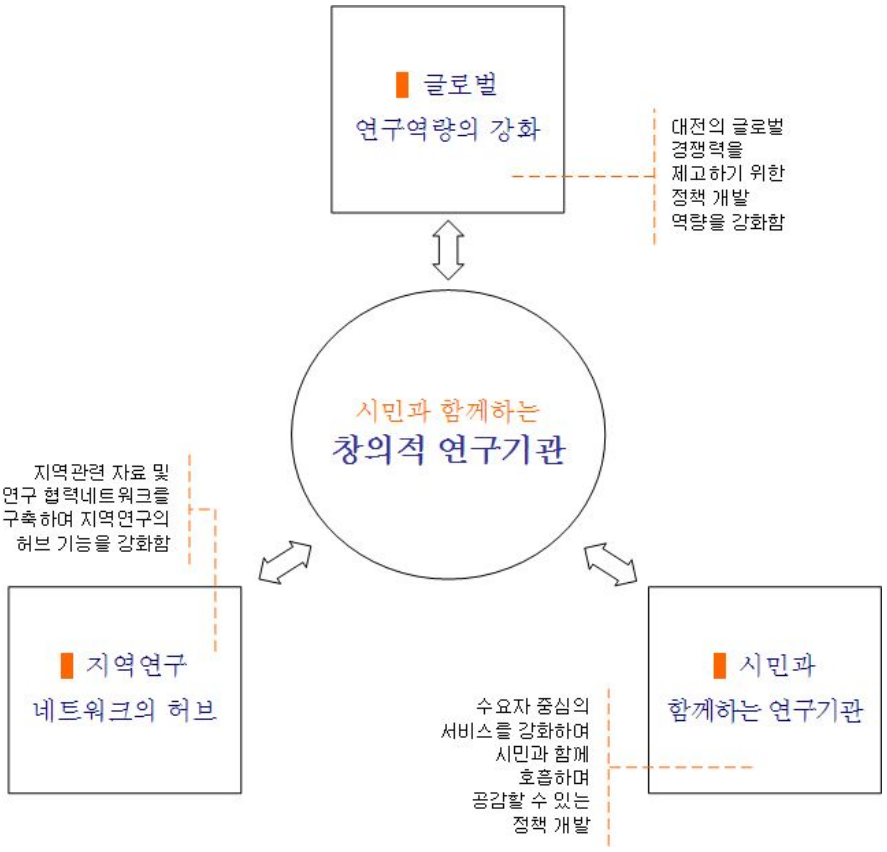
○ 대전발전연구원은 과학적인 방법과 민주적 절차를 거쳐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과 관련한 정책 연구개발 및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추진에 대한 자문, 성과 평가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 시민, 유관기관, 민간 및 전문가 단체의 다양한 분야별 상이한 관점과 논리들이 대전시의 발전 비전의 방향에서 설정될 수 있도록 조화와 매개의 기능을 수행한다.

○ 지역 의회, 시민단체, 노동조합, 지역기업, 언론 등 지역의 각종 유관

기관과 효율적인 의사소통 및 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책 과제 및 사업 발굴에 시민들의 목소리가 담겨질 수 있도록 한다.

○ 연구원의 웹사이트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시민들이 연구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시정의 현안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원의 대민 교류·홍보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연차별 발전계획

시민과 함께하는
창의적 연구기관

2007년

기획연구 역량 강화

인력 확충
조직체계 개편
제도 정비
연구 공간 확충

2009년

지역연구 허브 기능 강화

지역연구 DB 강화
인적 네트워크 구축
기관 협력체계 구축
연구원 독립 건물 마련

2011년

시민의 정책연구기관

연구의 독립성 강화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
중부권 정책연구의 허브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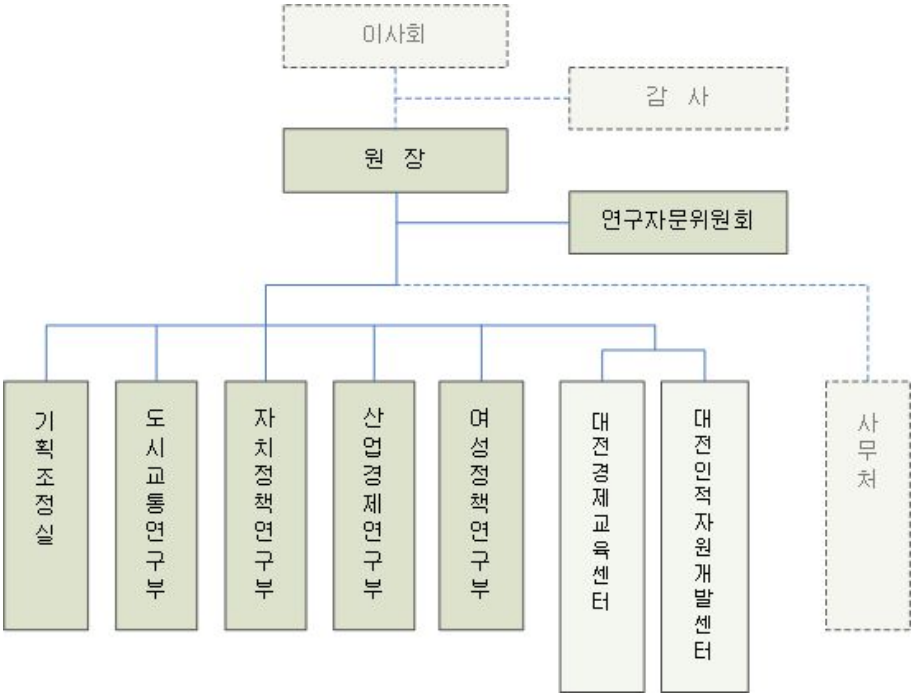
III. 부문별 계획

1. 조직체계

연구조직

○ 현황

- 연구조직 (2007.3)



- 기존 3부 2센터의 연구조직을 2007년 1월부터 '기획조정실'과 '여성정책연구부'를 추가 신설하여 5부 2센터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 연구인력 (2007.4)

구분	기획조정실	도시계획연구부	자치정책연구부	산업경제연구부	여성정책연구부	RHRD센터	경제교육센터	계
연구원	2*	5	4	3	2*	3	-	19
위촉연구원	-	4*	-	-	-	-	1	5
연구보조원	-	8	-	-	-	1	-	9
관리직	1	-	-	-	-	1*	-	2
계	3	17	4	3	2	5	1	35

* 충원 예정 인원을 포함시켰음

- 정규 연구직 직급 및 정원 (2007.3)

직급(위)별	정원	현원	과부족
계	18	13	△5
선임연구위원	4	2	△2
연 구 위 원	14	1	△3
책 임 연 구 원		10	
연 구 원		-	

- 전공별 정규 연구인력 (2007.3)

전체	도시계획	교통정책	지방행정	사회복지	교육문화	환경정책	산업경제	과학기술
13	3	2	1	1	1	2	2	1

- 연구자문회의 (2007.3)

전체	지역 개발	도시 계획	행정	교통	소비자 보호	사회 복지	문화	인적 자원	환경	관광	지역 경제	과학
19	1	1	1	2	1	2	2	1	2	1	2	1

○ 문제점

◦ 정규 연구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증대하는 연구 수요를 수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연구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급속하게 변하는 지역의 정책연구 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

- 전공별 정규 연구 인력의 규모가 작아 다수 연구원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수행해야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 연구 수요에 따라 '비상임연구원', '초빙연구원', '위촉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이러한 임시적인 인력 사용은 특정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전문 인력 육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 12개 분야 19인의 분야별 '연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만 아직 '연구심의위원회' 등과 같은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 '연구심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지 않아 과제의 '발굴'이나 '수행'에 대한 '자문', '심의', '평가'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의 질적 제고 및 결과물에 대한 정성적 평가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 개별 연구원의 경력과 관계없이 전체 정규 연구인력 13명 중 10명이 책임연구원급에 편중되어 불균형인 조직 구조를 이루고 있다.

○ 개선 방안

◦ 신설된 '기획조정실'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연구 과제의 발굴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기획·관리뿐만 아니라, 성과물의 배포 및 대외 홍보에도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 체계적인 성과물의 배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별 연구원의 수행한 연구 실적을 효과적인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연구원 전체가 협력해야 하는 공동 연구 과제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규모 연구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일정 정도의 연구 인력이 확보되어야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 연구 수요를 조사·평가하여 연구 인력을 적극 채용하고, 신규채용 연구원이 지원 가능한 타 연구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과감한 인력 충원을 통해서 점증하는 연구 수요에 대응하고, 특히 지자체에서 발주되는 대형 프로젝트를 소화할 수 있도록 연구진용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 '연구자문위원회' 적극적으로 가동하고, '연구심의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여 과제 발굴·수행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연구 결과물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연구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기본과제의 선정에서부터 그 수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연구수행을 스크린하고 그 결과를 연말 '질적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과제의 '발굴' 및 '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심의', '평가' 등을 통

해 연구의 질을 제고하고 평가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구심의위원회'가 체계적으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충분한 경력을 갖춘 일부 '책임연구원급' 연구원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업무 평가를 통해 '연구위원' 급으로 승진시켜 조직의 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 '책임연구원'의 명칭을 다른 시도연구원의 사례와 같이 '부연구위원'으로 개칭하여 사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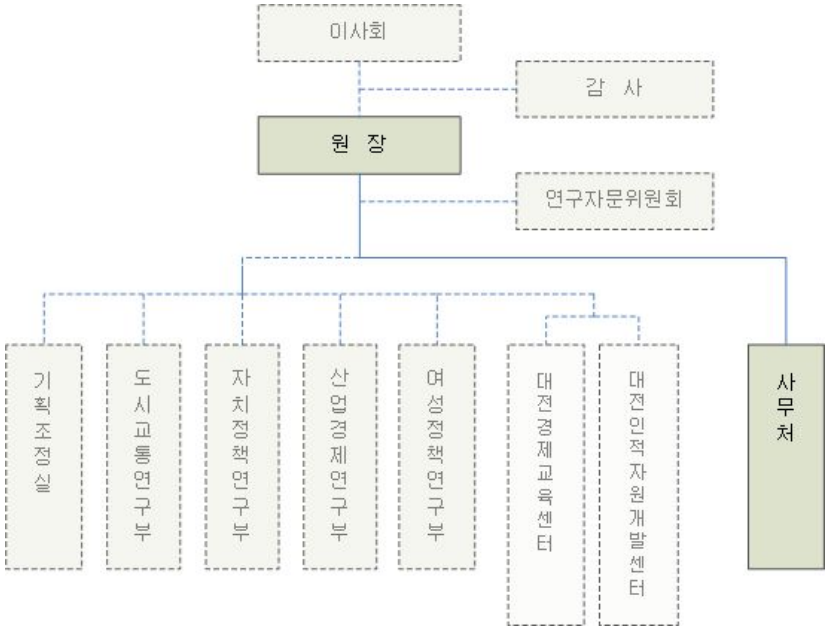
- 주요 연구원의 직급분류(명) 사례

대전발전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연구위원	연구위원	연구위원
책임연구원	부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연구원	연구원	책임연구원	책임연구원

행정조직

○ 현황

- 행정조직



- 행정지원 인력

구분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정 원	6	1	1	1	2	1	0
현 원	6	1	1	1	0	1	2
과부족	-	-	-	-	△2	-	2

- 사무처의 행정 지원 조직은 처장아래 '총무' 및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5인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 그동안 사무처가 연구원의 전반적인 지원업무를 담당해 왔으나 기획조정실의 신설에 따라 연구지원 업무는 기획조정실에서 분담하여 담당하고 있다.

○ 문제점

- 기획조정실을 신설하고, 연구지원 업무를 분담하여 사무처의 업무부담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아직 기획조정실 체계가 완벽하게 정비되지 않아 자료 관리나 대외 홍보 활동이 취약하다.
- 다른 시도연구원들은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신속·빈번하게 규정이나 규칙을 개정해오고 있는 반면에 우리 연구원은 규정이나 규칙의 개정에 매우 소극적인 경향이 있었다.

○ 강화방안

- 기획조정실의 기능을 강화하여 자료관리 및 홍보를 포함한 연구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다른 시도연구원과 같이 필요한 경우 특정 연구와 관련된 소소한 사안들은 해당 PM에게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불필요한 시간과 인력의 낭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
- 앞으로 연구원의 규모가 확충될 경우에는 사무처의 업무를 '총무팀'과 '예산팀'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충원

○ 현황

- 전공별 정규 연구인력 (2007.3)

전체	도시 계획	교통 정책	지방 행정	사회 복지	교육 문화	환경 정책	산업 경제	과학 기술
13	3	2	1	1	1	2	2	1

○ 문제점

- 점증하는 연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원 1인당 6~10개(2006년)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다보니 연구보고서의 질을 제고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 지역 정책 연구에 필요한 주요 전공별 연구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분야에 따라서는 아직도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 연구인력 취약 분야에 대한 협동 연구가 어려워 공동연구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가 어렵고, 다각적인 정책 분석 및 방안 제시가 어려운 실정이다.
- 종합적인 대형 프로젝트의 수행해야 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많이 참여시켜야 함으로써 높은 인건비 비율로 인한 전체 사업 예산의 운용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 전공별 정규 연구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향이 있다.

○ 개선방안

- 전체 연구원의 규모를 정규 연구원의 인력이 20명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연구원 규모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 단기적으로 대전시의 정책연구 수요를 고려할 때 '교통', '경제', '도시' 분야의 연구 인력을 시급하게 충원할 필요가 있다.

- 단기 충원 계획 (2007~2008년까지)

구분	계	도시 계획	교통 정책	지방 행정	사회 복지	여성 정책	교육 문화	환경 정책	산업 경제	과학 기술
현원	13	3	2	1	1	-	1	2	2	1
충원	5	1	1	-	-	2	-	-	1	-

- 대전광역시가 동북아의 과학기술 허브도시로 도약하게 됨에 따라 국제적 협력 연구나 세미나 등을 주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연구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 중기 충원 계획(2009~2010년까지)

구분	계	도시 계획	교통 정책	지방 행정	사회 복지	여성 정책	교육 문화	환경 정책	산업 경제	과학 기술
현원	13	3	2	1	1	-	1	2	2	1
충원*	6	1	1	-	-	2	-	1*	1	-

* 2007년까지 충원될 5인에 2009년까지 1인을 더 충원하여 총 6인을 충원

- 장기 충원 계획(2011년까지)

구분	계	도시 계획	교통 정책	지방 행정	사회 복지	여성 정책	교육 문화	환경 정책	산업 경제	과학 기술
현원	13	3	2	1	1	-	1	2	2	1
충원*	10	2*	2*	1*	-	2	1*	1	1	-

* 2009년까지 충원될 6인에 2011년까지 4인을 더 충원하여 총 10인을 충원

부설기구 운영

○ 현황

- 현재 본원의 하위조직으로는 '대전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와 '대전경제교육센터' 등 2개의 임시조직이 구성·운영되고 있다.

- 대전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국비예산 지원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대전경제교육센터는 재정경제부의 국비지원으로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문제점

- 직제규정에 '임시조직을 둘 수 있고, 운영에 관하여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운영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 아직 임시조직과 관련한 운영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센터의 조직내 '위상' 및 '직원의 채용 및 처우' 등과 관련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센터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개선 방안

- 시급하게 센터의 운영규칙을 마련하여 센터의 조직내 위상과 역할을 규정하고, 센터 직원들의 처우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를 지역의 교육발전 및 인적자원개발의 허브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종합지원기구로 확대·재편할 필요가 있다.

-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연구와 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센터로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다.

2. 연구수행

1) 연구관리체계

■ 연구과제 선정기준 및 절차 개선

○ 현황

- 현재 대전발전연구원의 기본과제의 제안은 '부서의 요청'과 '연구자 제안' 등 크게 2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 부서의 요청 : [각 담당실과] →[기획관리실(통합)] → [연구원 (협의)]
> * 연구자 제안 : 대전시로부터 해당분야 요청이 없는 경우 제안이 가능함

- 과제의 최종 선정은 시에서 보내온 과제에 대해서 해당분야 연구자가 검토·결정하여 대전시에 통보한다.

○ 문제점

- 과제가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제안되므로 대부분이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들이며, 따라서 수탁과제 혹은 정책과제의 성격이 강하다.

- '연구자가 제안'하는 경우 갖게 되는 주제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판단 과정 또는 기제가 부재하다.

- 주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탁과제가 수행됨에 따라 꼭 필요한 기초연구와 중장기적 수요에 대비한 연구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 타 연구원 사례

- 기본과제 선정

항목 연구원	연구계획수립	심의 및 확정	과제책임자	비고
국토 연구원	◦전문가(연구실, 센터별) 의견수렴 ◦과제선정운영반 운영	◦공개세미나, 워크숍 ◦연구혁신본부장이 중복성 검토 후 확정	◦원장지정 ◦연구계획서 작성(KOALA활용)	◦연구관리정보시스템(KOALA)활용 ◦선정과정의 다양화 및 투명화 ◦중복성 검토과정 ◦연 2회실시
경기개발 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연구심의 위원회와 이사회 의결 ◦경기도지사 승인	◦원장지정 ◦30일내 연구실시 계획서 작성보고	◦필요 시 상임연구위원 지정
서울시정 개발연구원	◦부·실장	◦기획조정실장협의 ◦원장검토	◦사업년도 개시전까지 계획서 제출	◦연구자문회의를 외부전문가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
인천발전 연구원	◦부서별회의	◦연구기획실장 협의 ◦원장 승인	◦10일내 연구시행계획서 작성보고	

* 참조 : 각 연구원 '규정집' 중 '연구사업 수행규칙'

- 정책과제결정과정

항목 연구원	연구계획수립	심의 및 확정	과제책임자	비고
경기개발 연구원	◦출연기관의 요청 혹은 자체적 결정	◦연구심의 위원회 심의·확정	◦원장지정 ◦연구사업계획서 작성보고	
서울시정 개발연구원	◦서울시요청 ◦자체적결정	◦기획조정실장 검토 ◦원장의 이사회보고		
인천발전 연구원	◦직원	◦운영위원회 심의 ◦원장확정		

* 참조 : 각 연구원 '규정집' 중 '연구사업 수행규칙'

○ 개선 방안

- 연구원의 주도아래 기본과제를 제안·수행토록 하며, 대전시로부터의 요청이 오는 과제는 정책과제 혹은 현안과제로 대체하여 수행한다.
- 가능하다면 기본과제는 1인 1건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 평가지표에 의거해서 대내외 의견을 수렴하고, 분야별로 연구과제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 현황

- 대전발전연구원은 기본과제에 대한 평가시에만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문제점

- 과제의 제안, 수행과정에서 자문 및 보완역할을 통해 연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 타 연구원 사례

- 연구원마다 형태는 다르지만 기본과제의 제안, 수행과정, 평가과정에서 연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 주요연구원의 연구위원회 운영현황

항목 연구원	위원회	구성	주요임무	비고
국토 연구원	◦과제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장, 간사, 센터장, 원내외 전문가2	◦실행연구계획서 1건당 구성하여 평가	◦전문가 풀 운영
	◦연구심의회	◦주심, 간사, 위원3	◦연구과제 1건당 구성하여 심의	◦3개월 미만은 구성하지 않음
	◦연구협의회	◦위원장, 간사, 위원5	◦연구과제 1건당 구성하여 협의	◦3개월 미만은 구성하지 않음
경기개발 연구원	◦연구위원회	◦위원장, 간사, 위원약간명	◦연구기획 및 지도 ◦연구수요 모니터링 ◦연구원 중장기계획 ◦연구사업의 심의 ◦연구·연구자평가 ◦기타	◦하위 회의로 '연구평가심의회'를 두며, 과제별 질적 평가시행
	◦심의위원회	◦위원장, 간사, 위원약간명	◦채용, 재임용 ◦연봉, 규정, 평가 ◦평가기준의결	◦위원장의 요청이나 위원 1/3의 요청시 소집
서울시정 개발연구원	◦연구사업소 위원회	◦위원장, 간사, 위원9	◦수탁,정책,협약연구수행 여부결정 ◦위탁연구기관선정 ◦기타 원장의 인정사항	
	◦연구자문위 원회	◦위원장, 위원40인 이내	◦서울시 및 연구원의 장기발전방향제시 ◦주요연구계획 ◦기타 원장의 인정사항	◦위원장의 제안으로 소집
인천발전 연구원	◦연구심의회	◦10인 이내 전문가	◦연구과제수행관련 내용과 결과평가	
	◦운영위원회	◦위원장포함 5-12인	◦연구원 운영관련 주요사항심의	

* 참조 : 각 연구원 '규정집' 중 '연구사업 수행규칙'

○ 개선방안

- 각 과제별로 '과제제안·운영·결과'를 자문 및 심의하는 '과제심의위원회(안)'를 두어 주제를 선별하고 수행과정을 합리화하여 연구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심의 결과를 평가에 활용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도모한다.

정책과제 및 현안과제 활성화

○ 현황

- 정책과제 및 현안과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연구원 개인별 과제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다.
- 현안과제의 경우에는 짧은 기간 안에 정책판단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지원이 체계가 필요하다.

○ 문제점

- '정책', '기본', '현안' 등의 과제 구분이 모호하고 각각 예산의 활용체계가 달라 예산확보 및 부족으로 연구에 어려움 발생하고 있다.
- 특히, 정책과제는 연구원 예산에서 활용하여야 하며, 현안과제는 재원지원의 근거가 미약한 상태이다.

○ 개선방안

- '정책과제', '협약과제', '현안과제' 등 체계적인 과제수행을 통하여 대전시의 정책판단을 순발력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연구원의 대처 능력은 바로 연구원의 존재 의의 및 위상 강화와 직결되므로 예산을 책정할 때 '정책' 및 '현안' 과제를 위해 예비비를 충분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수행체계 개선

위임전결 규정 개선

○ 현황

- 기본과제 및 수탁과제를 망라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내용은 사무처(| 직원 | → | 사무처장 |) 협조결재가 필요하다.

- '복사', '사무용품구입' 등 극히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원장결재가 필요하다.

- 규정상 상당부분이 연구실장 전결사항이나 실제로 이루어지는 행정처리 과정에서는 대부분 원장의 결재를 필하고 있다.

(예1)과제 착수단계 : 기본적인 서류('원가계산서', '과제수행계획서', '보안각서' 등)뿐만 아니라 '위촉연구원 채용', '용역심의' 등 다양한 절차에서 각각 [기안]→[부장]→[처장] →[원장] 순의 결재가 필요

(예2)과제 수행단계 : 실행예산 범위내에 있는 각종 비용 집행시 모든 건에 대하여 [기안]→[예산확인(사무처)]→[부장결재]→[처장결재]→[원장결재]가 필요

○ 문제점

- 연구원당 최소 3건~8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기안과 결재에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 타 연구원의 위임전결사례

- 연구책임자 또는 부서장 전결을 통해서 가능하면 불필요한 결재라인을 간소화하고 있다.

- 국토연구원

<연구책임자 및 팀장>

◦ 회의개최계획(50만원 이하), 국내출장(책임급이하), 물품과 소모품 청구의뢰
◦ 연구관련조사(300만원 이하),
◦ 기구・비품・차량・장서의 구입 중 50만원 이하
◦ 수탁과제 업무추진비중 50만원 이하
◦ 연구보고서 인쇄의뢰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장 또는 실장>
◦ 연구과제 세부시행계획 수립 · 운영
◦ 기타 경미한 연구관련 사업보고

○ 대전발전연구원의 위임전결규정

일련번호	업무내용		전결권자
	단위업무	세부사항	연구실장
1	◦연구사업운영	- 전결권 없음	
2	◦중장기계획 및 방침의 수립시행	- (4)결정에 대한 점검	○
3	◦연구과제별 연구사업수행	- 전결권 없음	
4	◦연구과제편성 및 조정	- (1)과제편성 및 조정을 위한 사전협의 - (2)결정사항에 대한 이행	○ ○
5	◦위탁용역연구	- (3)위탁연구관리	○
6	◦연구보고	- (3)기타 연구관련 사업보고	○
7	◦연구관련조사	- (2)조사실시	○
8	◦연구보고서	- (3)편집 및 배포계획 - (4)연구평가 결과 및 자문결과 보완	○ ○
9	◦세미나 개최 등 운영	- (3)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4)행사 개최에 따른 일반사항	○ ○
10	◦학술행사(세미나), 협의, 간담회	- (4)일반적인사항	
11	◦평가 및 심사분석	- (2)과제별 사업추진 평가 중 ㉯ 연구사업 진도 파악 분석	○
12	◦연구직원의 대외활동	- 전결권 없음	
13	◦연구자문위원회 운영	- (3)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14	◦연구원위촉	- 전결권 없음	
15	◦출판 및 편집	- 보고서 표준모델 통보 및 관리	○
16	◦간행물 발행, 기증 및 교환	- (3)간행물 배부(정기분) - (4)간행물판매 - (5)간행물 관련 타기관과의 협조	○ ○ ○

＊ 참조 : 대전발전연구원 '규정집'

○ 개선방안

- 네트워크를 이용한 전자결재를 통하여 대기 소요시간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 ‘부장’ 혹은 ‘연구책임자’의 위임전결항목을 대폭 개선하여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국토연구원’의 사례 참조).
- 기획조정실에서 ‘연구용역심의’, ‘기안문’ 등을 취합하여 ‘위원회 운영’ 및 ‘기안문의 처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 * 연구자가 [기안]을 하여 [사무처] 또는 [기획조정실]에 제출하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무처나 기획조정실에서 연구자에게 추가설명을 요청함

출장

○ 현황

- 국내출장의 경우 철도임 ‘2등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거의 ‘KTX’를 이용하고 있다.
- 대체로 책임연구원의 여비수준은 2급 관리직에 준하고 있으나, 대전발전연구원의 경우에는 책임연구원의 여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 본원의 여비 기준은 타 연구원과 비교할 때 ‘책임연구원’은 상대적으로 낮고 ‘관리직’과 ‘연구위원’은 높게 규정되어 있다.
- 본원의 국외여비지급구분 기준은 타연구원은 물론 대전발전연구원 자체의 국내출장비지급구분 기준과도 상이하다.
- 본원의 여비지급 등급은 준비금 등급 구분과 일관성 없이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다.

> * 대전발전연구원의 경우에는 **‘책임연구원’이 ‘4급과 동일’ 수준**인데 반하여 다른 연구원의 경우에는 ‘책임연구원’이 최소 **‘관리2급이상’(KRIHS, SDI, GRI)이며, 관리2급보다 높은 경우(IDI)**도 있음

- 대전발전연구원과 경기개발연구원의 해외여비지급기준 비교

대전발전연구원

구분	지역(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항공임	준비금($)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관리・정보2급	가	40	205	133	1등정액	연구부장 3급관리직 140
책임연구원 관리3급이하	가	30	145	81	2등정액	책임연구원 4급이하 130

경기개발연구원

구분	지역(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항공임	준비금($)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책임연구원 관리・정보2급	가	35	166	107	2등정액	160

○ 문제점

- 과제수행에 따른 국외출장경비는 연구원의 경우 직위에 관계없이 거의 동일한 경비를 지출하는 것이 상례이다.

- 만일 구분하고자 한다면, 연구원이 많고 직급이 높을수록 더 높은 책임과 역할을 하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직급보다는 연구책임자의 역할과 비용부담이 크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 있다.

- 본원의 경우에는 책임연구원이면서 연구책임자인 경우가 더 많으며, 현재 관리직 3급에 준하는 기준으로는 출장비 준비금이 부족하여 개인경비 지출소요가 발생하고 있다.

* 출장지에서 피방문자에게 선물, 회의 및 식사시 비용을 방문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 출장비가 부족함

○ 개선방안

- 국외출장비 지급구분을 ‘국내출장비 지급구분’에 준하여 개정하여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책임연구원’, ‘관리직 2급’을 동일한 수준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 ‘준비금’의 경우도 출장비지급구분을 적용하여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책임연구원’, ‘관리직 2급’ 이상으로 개정하여 타연구원과 형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 국외출장비에는 ‘실행예산내에서 연구책임자에게 방문 및 미팅에 필요한 실경비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회의수당 지급기준 개선

○ 현황

- 회의수당지급기준(대전발전연구원)

구 분	금 액
1. 이사회 및 연구자문위원회 참석	100,000
2. 각종연구업무회의(위원회)에 초청된 관계전문가	100,000
3. 인사위원회 참석	50,000
4. 세미나, 워크샵, 심포지엄, 토론회 등에 초청된 주제발표자, 지명토론자, 진행자	
◦발 표 자	400,000
◦사 회 자	200,000
◦토 론 자	200,000

- 실비보상기준

적 용 기 준	교 통 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를 제외한 전지역	1회당 30,000원

○ 문제점

- 국내외 저명한 인사를 초빙하여 수준 높은 세미나 행사를 개최하기에 위해서는 세미나 참여 수당의 제한이 너무 낮게 규정되어 있다.

- 세미나에 참여하기 위해 오시는 분들의 실제 교통비를 감안할 때 실비보상기준을 '1회당 30,000원'으로 책정한 것은 지나치게 낮다.

○ 개선방안

- 연구원의 행사에 수준 높은 인사를 초정할 수 있도록 '발표자', '사회자', '토론자' 등의 참여수당 상한선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

- 회의수당지급기준 개선(안)

※ 세미나, 워크숍, 심포지엄, 토론회 등	◦ 발표자 600,000원 ◦ 사회자 400,000원 ◦ 토론자 300,000원

- 실제 교통비를 감안하여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를 제외한 지역 참여자들의 실비보상기준을 '1회당 50,000원'으로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

- 실비보상기준 개선(안)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를 제외한 전지역	→ 1회당 50,000원

내부수익금 및 연구장려금(인센티브) 산정방식 개선

○ 현황

- 수탁과제로 인한 수입금은 용역수행과 연구원 운영에 충당토록 하고 있으나 용역수행에 필요한 경비지원이 미비하다.

※규정 : "수탁용역사업수익은 별도계정으로 설치, 관리하며 용역수행에 관련된 제반 경비 및 연구원운영에 충당한다".

- 용역수행에 필요한 '소모품 재료'는 물론 '프린터 토너', '컴퓨터의 소모품', '선반' 등 연구기반시설의 경우에도 70%의 실행예산에서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 문제점

- 불필요한 업무상 상충 및 유권해석으로 연구수행을 어렵게 하고, 수탁용역 수행연구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경향이 있다.

- 내부수익금의 비율이 높고, 비율조정에 대한 융통성이 낮아서 연구과제의 부실이 우려된다.

- 내부 수익금에서 연구장려금의 편성비율이 낮아 과제부실 및 사기저하의 우려가 있다.

- 타 연구원의 내부수익금 처리

구분	실행예산	내부수익금	실행	비고
GRI	수탁액의 70% 위탁시 위탁액을 제외한 80%	◦30% ◦위탁시 위탁액을 제외한 금액의 20%	◦업무추진, 개발보전: 수탁액의5% ◦특별연구장려금편성: 실행예산의 10%	◦위탁의 경우 계약금의 80% 초과금지
SDI	(수탁액-위탁액)의 90~75%	◦10~25%	◦기관운영비:(수탁액-위탁액)의10~30% ◦실적평가금:(수탁액-위탁액)의 5%	◦위탁의 경우 계약금의 50% 초과금지
IDI	수탁액의 75% (수탁액-위탁액)의 75%	◦25% ◦위탁시 위탁액을 제외한 금액의 25%	◦위탁업무추진: 수탁액의 5% ◦연구장려금: 사업수익의 15%	◦위탁의 경우 계약금액의 50% 초과금지
DJDI	수탁액의 70%	◦30%	◦업무추진, 개발보전 : 수탁액의 5% ◦특별연구장려금편성: 사업수익의10%	◦부득이한 경우에 30% 이내로 가능

* 참조 : 각 연구원 '규정집' 중 '연구사업 수행규칙'

○ 개선방안

- 수탁용역으로 발생한 수입금은 별도계정으로 처리하고, '컴퓨터 업그레이드', '카트리지', '프로그램구입' 등 연구기반 시설 및 품목에 대해서 우선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 수탁과제 예산편성 (실행계산, 내부수익금, 장려금)

구분	수탁과제의 경우	외부위탁이 있는 경우
실행예산	수탁액의 70%	(수탁액-위탁액)의 75%
내부수익급	수탁액의 25%	(수탁액-위탁액)의 20%
장려금*	실행예산의 5%	(수탁액-위탁액)의 5%

* 기여한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함

위탁관련규정 마련

○ 현황

- 위탁 관련 세부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서 일관성 있는 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문제점

- 일정한 기준이나 준칙이 없어 매 과제시 혼란를 야기하고 있다.

○ 개선방안

- 위탁관련 규정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업무추진비 집행

○ 현황

- 용역사업 수행시에 예기치 못한 공식 미팅이나 예산소요에 대하여 예산을 지출할 수가 없다.

- '업무추진 및 개발보전비'를 수탁금액의 5% 내에서 집행가능토록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문제점

- 모든 건에 대해서 결재와 사용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 개선방안

- 결재 절차를 단순화하고, 예산사용 범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 부서별로 카드를 마련하여 사용 후에 일괄 보고하는 형식으로 통제하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위촉연구원 제도

○ 현황

- 위촉연구원의 보수는 어느 정도 현실화되었으나 연구환경 조성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 경기개발연구원은 '석사급' 위촉연구원 인건비가 1,800,000원/월 이상임

- 위촉연구원도 출장을 가야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연구원이 직접가는 것만 인정해 왔다.
- 위촉연구원의 전화번호, 명함 등의 내용들이 미흡하여 사업을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고 있다.
- 위촉연구원 보수는 일부 개선되었으나 4대 보험 등의 부담이 있어 실제로는 기존 115만원에서 126만원으로 10여만원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다.

○ 개선 방안

- 위촉연구원의 보수를 현실화하여 위촉연구원의 수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위촉연구원도 출장비를 연구원과 같이 집행가능토록 규정을 개선해서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한다.
- 위촉연구원의 경우고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하계휴가가 허용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선한다.
- 위촉연구원에게도 개인별 전화번호, 공간문제, 컴퓨터 등 최소한의 근무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보고서 인쇄

○ 현황

- 대전지역내 몇몇 업체를 선정하여 POOL을 구성한 후 순번제로 시행하고 있다.

- 인쇄업체의 책임감 저하뿐만 아니라, 인쇄술의 차이로 인해 품질 저하가 나타나고 있고, 한 번 잘 못되면 돌이키기 어려워서 전체 용역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 타 연구원의 보고서 인쇄 전결기준

◦ 국토연구원	연구책임자 전결
◦ 경기개발연구원 ◦ 인천발전연구원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원장승인

○ 개선방안

- 인쇄는 행정절차문제 이전에 용역의 결과 및 품질에 대해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연구부서 소관이라 할 수 있다.

- 용역과제와 같이 연구책임자가 연구물의 품질을 최종적으로 책임져야하는 경우에는 업체의 선정에 연구책임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3) 연구수준제고

■ 연구원의 전문성 강화

○ 현황

- 연구원의 자기 개발이나 전문성을 갖추도록 자극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 문제점

- 과제수행 연구원에 대한 신뢰상실이 연구기관 자체의 신뢰 저하를 초래해 결국 주요 프로젝트나 핵심과제 등을 본원이 아닌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 개선방안

- 연구기관간 공동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시행하고, 상호 협약 체결을 통한 연구 정보 및 인적 교류를 활성화 한다.
- 원내에 신문 및 잡지 구독실을 마련하고, 가능하면 관련 연구기관의 발간물 전체에 대해서 정기 구독을 하고, 학회 등에도 단체회원으로 가입하여 학술지를 구독할 수 있도록 한다.
- 국내외 학술지 기고를 권장하고, 국내외 학술지 기고실적을 SCI 및 KSCI분류에 따라 평가하며, 국제학술대회 주제 발표시에는 참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연구워크숍 활용을 통한 연구능력 향상

○ 현황 및 문제점

- 각 분야별로 연구 주제에 대한 접근방식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부분 연구방법을 공유하는 경우가 있다.
- 예컨대, ‘통계분석’, ‘AHP’ 방법 등은 여러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적용

및 활용가능성이 높은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 그동안 연구의 주제발굴이나 보고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개인적으로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 타연구원의 사례

<국토연구원>
◦ 매년 정기적으로 연구 혁신 워크숍 개최
◦ 2007년 주제
'연구잘하는 길'
'국토연구를 위한 GIS활용'
'순서화로짓모형의 활용'
'시각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보고서 작성방법'

<한국교통연구원>
◦ 매년 연구력 제고를 위한 세미나 개최 (예: '영어발표문 작성법)

○ 개선방안

- 내부 혹은 외부발표자 초빙하여 정기적인 연구혁신 워크숍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

연구인력의 확충

○ 현황 및 문제점

- 대전광역시의 연구원에 대한 정책적 의존도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지고 있다.
-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한 현안과제와 정책과제, 그리고 수탁과제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력 제고가 필요하다.
- 현재와 같은 상황이 경우 연구원의 피로도 누적은 물론이고 연구의 완성도 및 질적 수준저하로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 개선방안

- 현재 및 향후의 과제 수요 등을 조사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조속하게 인원 확충을 할 필요가 있다.

<수요조사에서 고려할 사항>
◦ 수탁과제, 정책과제, 현안과제 등 수행실적
◦ 향후 정책지원 연구수요
◦ 타 특별 및 광역시 연구원 조직

4) 연구환경 개선

연구실 공간

○ 현황

- 본원의 연구공간은 활용 총면적 약 238평(788㎡=총면적:868.43㎡-인적자원면적:80㎡)으로 연구직 1인당 평균 3.9평, 위촉연구원 1인당 평균 1.3평을 사용하고 있다.

- 각 연구원별 1인당 연구공간 (인/평)

구분	DJDI	GRI	KDI	SDI	IDI
평/연구직1인	3.9	6	5	6	5
위촉연구원	1.3	초빙 6 위촉 3			

* 참조 : 각 연구원 '규정집' 중 '연구사업 수행규칙'

- 사무실, 회의실, 자료실 공간(평/연구직1인)

구분	회의실	작업실	휴게실
대전발전연구원		0	0
경기개발연구원	3	0.6	0.5

* 참조 : 각 연구원 '규정집' 중 '연구사업 수행규칙'

○ 문제점

- 일차적으로 쾌적한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문제 이전에 수탁과제 수행에 필요한 최소 공간조차도 부족한 실정이다.

- 또한 업무 공간뿐만이 아니라 '회의실', '작업실' 등의 확충도 시급하며, 외부인 방문할 경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휴게실 공간도 갖추어져야 한다.

○ 개선방안

- 단기적으로는 신설되는 ‘기획조정실’, ‘여성정책부’ 인력과 교통분야의 새로운 인력 5명(초빙연구원 1, 위촉연구원 4인)의 업무 공간이 시급히 필요하다.

- 중기적으로는 비좁은 시청의 건물에서 벗어나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서 사용하되, 장기적으로는 연구원을 위한 독립 건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연구원의 자기개발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체력단련’이나 ‘어학학습’ 등과 같은 연구원의 자기개발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 개선방안

- 타 연구기관의 경우와 같이 우리 연구원도 위촉연구원을 포함한 직원들의 자기개발에 대한 지원하고, 그를 통해 연구원의 자부심과 연구 역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안식년제 및 안식월제 도입

○ 현황

- 연구원의 규정에 따르면 8년 이상 근속시 안식년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있다.

○ 문제점

- 타연구원에 비하여 안식년까지의 근속기간이 길고, 안식기간 또한 짧은 편이다.

- 연구원별 연구년 및 연수제도

항목 / 연구원	제도	자격요건	시행조건	기간	비고
국토 연구원	훈련	◦7년이상 근속 ◦최근2년간 근무평점 B이상	◦유학 ◦타 기관에서 전문지식연마	◦1년 이내 ◦석사2년, 박사3년 필요 시 1년연장	훈련이수 후 의무기간동안 복무
경기개발 연구원	연구년 휴직	◦6년이상 근속	◦타 기관에서 전문지식 연마	◦1년 이내	휴직종료15일전까지 연구결과보고, 30일까지 연구보고서 제출
서울시정 개발연구원	시찰연수	◦4년이상 근속	◦필요에 의한 원장의 승인	◦3개월 이내	훈련이수 후 의무기간동안 복무
	연구연수	◦7년이상 근속	◦기술 및 이론의 습득	◦1년 이내	
	학술연수	◦3년이상 근속	◦대학원급이상의 수학	◦2년 이내	
	사적연수	◦외국4년, 국내는 1년이상 근속	◦해외유학	◦2년 이내	
	장학금연수		◦장학금 연수	◦장학금수혜기간	
	기타연수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6개월이상임용	◦2년 이내	
인천발전 연구원	특별휴직	◦6년이상 근속	◦타 기관에서 전문지식 연마	◦1년 이내	연장기간은 무급
	연구년휴직	◦6년이상 근속 ◦연구실적우수	◦타 기관에서 전문지식 연마	◦6개월기준이나 필요시 1년으로 연장	
대전발전 연구원	특별휴직	◦8년이상 근속	◦타 기관에서 전문지식 연마	◦1년이내	1개월이내 휴직결과보고

* 참조 : 각 연구원 '규정집' 중 '연구사업 수행규칙'

○ 개선방안

- 우리도 타 연구원과 같이 6년이상 근속시 2년이내 안식년이 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연구원이 재충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1년간 지속적으로 과제를 수행한 연구직의 경우 과제수행이 완료되는 시기에 1개월 범위 내에서 안식월을 허용하여 다음 과제 수행을 위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3. 인사관리

1) 인력체계와 정원

■ 신규채용

○ 현황

- ‘직원’과 ‘연구직원’을 구분하고 신규 임용시 ‘직원’에 대해서만 전직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 전직 근속년수에 해당하는 호봉을 초임호봉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다.

-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연구직원으로 신규인용된 자’의 연봉은 전직 경력을 고려하지 않고 임용대상 직급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만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적용이 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원장이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신규채용자의 연봉책정 관련 규정(대전발전연구원)

> ① 직원의 신규 임용시 초임호봉은 2호봉을 기준으로 한다.
>
> ② 전직 경력이 있는자의 신규임용 할 때의 초임호봉은 [별표2]의 경력환산표에 의한 근속년수에 해당하는 호봉을 초임호봉에 가산한다.
>
> ③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연구직원으로 신규인용된 자의 연봉은 [별표1]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연봉계액의 하한액으로는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적용이 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문제점

◦ 신규 ‘직원’의 경우는 전직 경력을 인정해주는데 반하여 ‘연구직원’의

경우에는 전직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전직 경력이 있는 신규 연구 인력을 채용할 경우 '직원'과 '연구직원'을 구분하고, 직원에 대해서만 전직 경력을 인정해주는 시도연구원은 대전을 제외하고는 전국 어디에도 없다.

◦ 본원의 경력환산 기준과 달리 다른 대부분의 시도연구원에서는 경력환산을 직종별로 구분해서 하고 있다.

- 다른 대부분의 시도연구원과 달리 대전발전연구원의 경력환산은 연구직과 관리직의 경력이 동일한 기준에 의거해서 환산하도록 되어있다.

- 대전발전연구원과 인천발전연구원의 경력환산표 비교

대전발전연구원

구분	경력내용	산정율
원 장 연구직 관리직	1. 군복무 기간 2. 공무원 근무경력 3. 정부 및 지방투자기관 근무경력 4. 유사업무 유사업종 근무경력	100% 100% 100% 50%

인천발전연구원

구분	경력내용	산정율
연구직	1. 대학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근무경력 2. 관련 분야 공무원 근무경력 3. 기타 연구업무와 유사하다고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력	100% 100% 운영위결정
관리직 기능직	1. 공무원 근무경력 2. 정부 중앙 및 지방 투자기관 근무경력 3. 기타 행정 및 정보관리 업무와 유사하다고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력	100% 100% 운영위결정

※ 대학강사 경력은 학기당 9학점 이상을 6개월에 대한 100%로 인정하고, 9학점미만은 비율로 정함 (학기당 9학점 이상일 때에도 100%로만 인정)
※ 군 복무경력은 100%를 연봉책정에 반영함
※ 모든 직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자신의 경력사항에 대한 소명기회를 가질 수 있음

○ 개선방안

- 다른 시도연구원과 마찬가지로 신규 연구 인력의 '초임연봉책정시'에 경력산정기표에 의거해서 산출된 '전직 경력을 가산'해서 연봉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

> ※ '인천발전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시도연구원들이 '신규임용시' 연봉책정과 경력의 환산기준을 마련하고, 신규채용자의 '전직경력'을 초임연봉책정에 가산하고 있음

- '연구직', '관리직', '기능직' 등 직종을 구분하여 '경력산정기준표'를 만들고, 연구직은 연구관련 경력, 관리직은 관리관련 경력, 기능직은 기능과 관련한 경력 등이 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승진

○ 현황 및 문제점

- 본원의 규정의 '승진 소요년수'는 여타 다른 연구원에 비해 지나치게 길게 비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 본원의 | 책임연구원 | → | 연구위원 | 의 승진 소요기한이 다른 연구원에 비하여 지나치게 길다.

- 연구원별 승진과정 및 소요 최저년수 (연구직 기준)

항목 / 연구원	승진소요년수			
국토연구원 (최소년수 미확보)	◦인사관리규정 제5조의 임용기준자격에 달한자 ◦승진심사 대상자는 직종별, 직급별 승진임용자격에 달한 자로서 직전 3년간 종합평정평점 중 평점 B이상을 2회이상 받은자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4년	2년	3년	3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4년	3년	4년	
인천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4년	7년		
대전발전연구원	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4년	5년	5년	

○ 개선방안

- 다른 시도 연구원과 형평성을 맞추어 '책임연구원에서 연구위원', '연구위원에서 선임연구위원' 승진 소요년수를 5년에서 4년으로 낮추고, '승진자격'은 부여하되 평가를 통하여 승진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책임연구원] ——(4년)——→ [연구위원] ——(4년)——→ [선임연구위원]

임용 및 정년제도

○ 현황

- 현행 제도에 따르면 최초 1년 임용, 이후 매 2년 주기 재임용 계약을 하게 되어 있어 연구원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주지 못하고 있다.

- 연구원의 정년 규정이 다른 시도연구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르게 규정되어 있다.

- 주요 연구원별 정년 및 임용계약 (2004년 2월 현재)

구 분	연구직 정년	임용계약 단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60세	초임2년, 재임3년
부산발전연구원	61세	초임, 재임1년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상 62세, 연구위원 이하 60세	초임, 재임 1년
광주전남발전연구원	63세	초임, 재임 2년
경기개발연구원	60세	평가(1~3년 차등)
강원발전연구원	60세	초임, 재임 1년
충북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65세, 연구위원 61세	초임, 재임 3년
제주발전연구원	60세	초임, 재임 2년
대전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이상60세, 연구위원 이하57세	초임, 재임 2년

○ 개선 방안

- 고령화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모든 직종의 퇴직 연령이 늦추어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장기적으로 연구원의 정년도 다른 연구원과 형평성 있게 연장할 필요가 있다.

- 연구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58세부터 매년 임금의 5%씩을 삭감하여 지급함으로써 예산 운영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2) 평가체계

양적 평가

○ 현황

- 양적평가는 전체 35점 만점에 '연구실적' 25점과 '연구외 활동' 10점으로 구분된다.

- 25점 만점에서 연구실적 배점은 '기본과제'가 1과제당 7점, '용역', '협약', '보조' 과제는 용역비에 따라 5~4점으로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 공동연구과제의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100%, 공동참여자는 30%의 실적을 적용받는다.

- 양적평가지표

평가 대상	평 가 요 소	배점	평가 점수	적 요
연구 실적 (25점)	기본과제(1건당 7점)	25		◦외부위탁금액 제외 ◦공동연구: 주관자100%, 참여자30% ◦납기(완료) 지연시 건당 감점 가능
	용역, 협약, 보조과제 (5천미만 4점, 5천이상 5점)			
	정책과제(1건당 1점)			
연구외 활동 (10점)	대전발전포럼 원고 게재(1회 1점)	10		
	공인된 학술지 원고 게재(1회 1점)			
	자체 세미나, 공청회 주관(1회 2점)			◦과제수행관련 제외 ◦공동개최시 50%적용
	세미나, 공청회 주제발표(1회 1점)			
	세미나, 공청회 토론자(1회 0.5점)			
	신문기고, 방송출연(1회 0.5점)			
점 수 합 계		35점	( )점	

○ 문제점

- 평가가 단순히 연구과제의 양과 수를 많이 수행한 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어 과도하게 과제 수만 많이 수행하게 되어 연구과제의 질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다.

- 대형 용역과제를 수행할 경우 '공동연구자'가 많아도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점수를 얻을 수 있어 100%를 기준으로 참여도에 명확하게 분배할 필요가 있다.

- 양적평정은 양에 대한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양적실적'과 '연구외 활동'의 점수를 각각 25점과 10점 만점으로 제한한 것은 순수한 의미의 양적 평가라 할 수 없다.

- 1개 과제별 배점을 단순히 용역비의 크기에 따라 '오천 이상'은 5점, '오천 이하'는 4점으로 규정하고 있어 과제에 투여되는 노력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 ※ 과제에 투여되는 노력의 양은 단순히 용역비의 크기에 비례하지 않으며, 사회과학 분야는 공학 분야에 비해 용역비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투여하는 노력의 양은 더 큰 경우가 많음

- '정책과제'는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현안과제'와 달리 상당한 노력이 투여됨에도 불구하고 평점을 1점으로 규정한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 '세미나' 또는 '공청회' 등을 주관하는 활동은 1회 '2점'을 부여하는데 반하여 '공인학술지에 발표하는 글'은 1점으로 배점되어 있어 투여하는 노력의 크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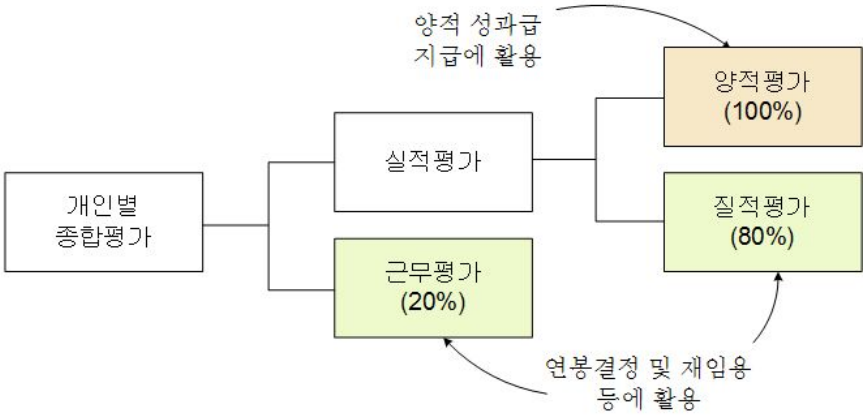
- 공동연구과제의 참여율을 연구책임자 100%, 공동참여자는 30%로 획정하는 것은 각 연구원의 실질적인 기여도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 개선방안

-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정량평가는 순전히 연구에 기여하는 양적인 측면만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 양적 평가의 상한선을 없애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경우처럼 양적 평가의 결과는 연구 장려금 지급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사례



- 공동연구 성과물에 대한 참여 연구자의 기여도는 일차적으로 연구책임자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므로 전체 100%내에서 전적으로 연구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각각의 참여율을 조절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 ‘SCI’, ‘KSCI’, ‘학회발표’ 등을 구분하여 연구외 활동의 각 항목에 대하여 배점을 공정하게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질적 평가

○ 현황

- 질적 평가는 '기본과제'를 중심으로 각 연구원당 과제를 각각 1개씩 선정해서 '원장', '관련분야 공무원 2인', '외부전문가 2인' 등 총 5인으로 구성된평가위원에 의해 평가를 받는다.

- 질적 평가는 총 40점 만점으로 '평가위원에 의한 평가' 35점과 관련 '공무원에 의한 고객평가' 5점으로 구분하여 실시된다.

- 질적평가지표

평 가 항 목		배 점	평가점수	비 고
연구방법의 적절성	◦주제검토 및 분석방법의 적합성	5		
	◦내용구성 및 논리전개의 체계성	5		
연구내용의 충실성	◦내용 표현의 명료성, 구체성	5		
	◦보고서 작성의 충실성·노력도	5		
	◦결론의 적합성	5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정책 목표로의 반영가능성	5		
	◦정책수단의 적용가능성	5		
점 수 합 계		35점	(　　)점	

※ '전문평가위원' 평가 점수 '35점'에 '관련공무원'에 의한 '고객평가' 점수 '5점이 포함되어 질적 평가의 전체 평점은 총 '40'점으로 배점되어 있음

○ 문제점

- 본원의 기본과제 선정은 다른 연구원의 기본과제 선정 방식과 달리 일차적으로 시의 담당자가 원하는 과제를 연구원이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주어지는' 어려운 과제를 수행할 경우도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도 있게 된다.

- 분야별로 다양하게 구성된 전공별 연구원들의 성과물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가위원 자체가 그 각각의 분야에 정통한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되어져야만 한다.

- 현재 부서별로도 전공 영역의 특성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위해서는 그 만큼 많은 수의 평가자위원을 위촉해야하겠지만 위촉 그 자체도 어려운 일이거니와, 설령 다수의 평가자를 위촉했다 하더라도 평가자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평가자의 개인별 성향으로 인해 평가의 객관성은 약해지게 된다.

- 전반적인 연구 과정(주제의 선정을 포함)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는 제3의 평가자가 갑자기 보내온 '연구 결과물'을 보고 평가를 하게 될 때 비록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라고 하더라도 시정과 연구물과의 관계성을 알지 못한다면 '보고서'에 대해서 깊이 있는 평가를 할 수가 없다.

○ 개선방안

-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사례와 같이 '질적 평가'는 순수하게 기본과제 중 선정된 1개 과제를 중심으로 평가('40점' 만점)를 하고, '근무평가' 개별 연구원이 기여한 활동을 정성적으로 평가(60점 만점)하여 그 종합 결과를 '연봉결정 및 재임용'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 평가위원에 의해 수행되는 질적 평가는 '객관성'과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5인 평가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상 최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의 평균점수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

- 질적 평가의 의미는 궁극적으로 연구과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평가점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심회' 등을 거쳐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 연구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정량의 연구과제 수행하고록 유도하

되, 시정 및 연구원의 발전에 기여한 부분에 대한 정성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질적 평가의 대상은 '기본', '수탁', '정책', '협약' 과제 등을 모두 포함하되, 원칙적으로 기본과제를 제외한 기타의 과제는 과제책임자가 원하는 경우 또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평가한다.

근무 평가

○ 현황

- 근무평가는 연구원 상호간 협조성, 전문지식 및 적성, 연구과제에 대한 분석 및 해결능력, 연구과제수행의 충실성, 과제수행의 책임성 및 적극성 등 각 항목에 대하여 5점씩 총 25점으로 평가한다.

- 근무평가지표

평가대상	평가요소	배점	평가점수		적 요
			평정자	확인자	
근무성적 (25점)	연구원 상호간 협조성	5			
	전문지식 및 적성	5			
	연구과제에 대한 분석 및 해결능력	5			
	연구과제수행의 충실성	5			
	과제수행의 책임성 및 적극성	5			
점수합계		25	( )점	( )점	
종합평점	( )점				(평정자+확인자)/2 *확인자가 기재

○ 문제점

- 평가의 초점이 근무태도 및 수행능력에 맞추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초 준거가 없다 보니 주로 양적 성과물에 기초해서 평정하게 되는 경향이 있었다.

- 연구자의 양적 실적이 '정성적 평가'인 근무평가에도 크게 영향을 미

치면서 종합평정 결과는 연구의 질과 무관하게 주로 양적 성과물이 다수인 연구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 원장은 연구원들의 세세한 특성이나 활동에 대한 깊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확인자'로서 '평가자'의 평정 결과에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 평가자로서 '부서장'은 부서원과의 관계 때문에 가능하면 다른 부서에 비해 자신의 부서원에게 유리한 평정을 하려고 노력하므로 확인자가 평가자의 평정 결과에 의존하게 되면 근무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 현 평정등급에 따른 평가방식은 순위위주의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연구원 각자의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불가피하게 D등급자가 발생하게 되어 연구원간 협력보다는 지나친 경쟁을 야기할 수 있다.

○ 개선방안

- 근무평가는 근무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이어야 하며, 또한 정성적 평가이므로 양적 결과물보다 질적 기여도에 대한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평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현재의 연구원 규모에서는 현행 근무평가 제도의 기조를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조직의 규모가 확대될 경우에는 다면평가 제도의 도입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현 '상대평가' 제도에 '절대평가' 방식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D등급의 절대점수를 정하고 그 점수 이상 취득자에 대해서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평가'란 궁극적으로 처벌보다는 연구장려를 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나친 처벌주의 또는 순위주의는 지나친 경쟁을 야기하여, 연구원의 단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연구원간의 자료 및 정보 등을 공유하지 않는 등의 역기능 초래하게 됨

- 평가체계 개선안

구성	평가점수 산정	점수단위 통일을 위한 환산점수 산정	점수	비고
양적평가	∑(가중치×참여율)	100점 만점으로 계산 (30% 적용)	30점	재임용 및 차년도 연봉결정 자료로 활용
질적평가	∑(종합기여도)	100점 만점으로 계산 (40% 적용)	40점	
근무평가	근무평정표에 의해 평가권자가 점수 부여	100점 만점으로 계산 (30% 적용)	30점	

- 양적 평가는 '기본', '수탁', '정책', '협약', '현안' 과제 등에 대한 개인별 참여도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한다.
- 질적 평가는 '기본' 과제 1건을 대상으로 하되 불가피하거나 과제책임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수탁', '정책', '협약' 과제 등을 평가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 근무평가는 능력평가, 태도평가, 연구과제 수행실적, 기타 업무활동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장기적으로 조직 구성이 '팀'제로 바뀔 경우 '근무평가' 30% 중에서 5%는 '팀' 평가 점수를 포함시켜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협력 및 공동 연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3) 보수체계

경력환산

○ 현황

- 거의 모든 시도연구원의 경력 환산이 연구직과 관리직을 구분하고 있는데 대전발전연구원의 경우는 직종을 분리하지 않고 경력을 환산하고 있다.

- 경력환산기준표(대전발전연구원)

구분	경력내용	환산율
원 장 연구직 관리직	1. 군복무 기간 2. 공무원 근무경력 3. 정부 및 지방투자기관 근무경력 4. 유사업무 유사업종 근무경력	100% 100% 100% 50%

- 경력산정기준표(인천발전연구원)

구분	경력내용	산정율
연구직	1. 대학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근무경력	100%
	2. 관련 분야 공무원 근무경력	100%
	3. 기타 연구업무와 유사하다고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력	운영위결정
관리직 기능직	1. 공무원 근무경력	100%
	2. 정부 중앙 및 지방 투자기관 근무경력	100%
	3. 기타 행정 및 정보관리업무와 유사하다고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력	운영위결정

※ 대학강사 경력은 학기당 9학점 이상을 6개월에 대한 100%로 인정하고, 9학점미만은 비율로 정함 (학기당 9학점 이상일 때에도 100%로만 인정)
※ 군 복무경력은 100%를 연봉책정에 반영함
※ 모든 직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자신의 경력사항에 대한 소명기회를 가질 수 있음

○ 문제점

- 연구원의 경력환산은 기본적으로 연구경력이 기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력환산기준표에는 연구직과 관리직의 구분이 없어 동일한 기준에 의거해서 불합리한 경력산정을 해왔다.

- 대부분 시도연구원의 경력환산은 국립대나 사립대의 구분이 없이 동일한 수준의 연구경력으로 인정을 해 주는데 반하여 본원의 경우에는 이 양자의 경력을 차별적으로 환산하고 있다.

- 현행 경력환산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력조차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불만을 낳을 소지가 있다.

○ 개선방안

- 통합된 경력환산표의 연구직과 관리직을 따로 분리시켜 연구직은 연구경력에 기초하고 관리직은 관리직 경력에 기초한 새로운 경력환산표를 작성해서 적용하도록 한다.

- 그동안 학기당 9시간 이상의 대학 강의 경력을 50%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타 시도연구원과 형평을 맞추어 100%로 인정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 국립대와 사립대의 구분을 폐기하고 박사 후 연구경력 및 9시간 이상의 강의경력은 모두 100%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경력환산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4. 협력 네트워크

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 지역 연구자들의 공동 연구나 인적 교류를 통한 협력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정비되지 않아서 상호 교류가 단지 개별 연구자 차원에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 국내외 교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연구원들의 공동 협력 연구나 교류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기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개인 연구자가 단순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 체계적인 협력 연구의 기획과 실행이 요구된다.

○ 발전방안

◦ 국내외 연구원간의 공동사업 및 인적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 규정에 명문화되어 있는 연구원의 연수 제도를 실질화하여 지속적인 연구 활동에 지친 연구원들이 역량을 재충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정규직 재직인원 중 일정비율(10%)에 대해서 연구연수의 기회를 부여하고, 현행 8년 단위로 되어 있는 연구 연가를 허용 기간을 6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 국내 연구기관 연수 등 공동연구를 위한 교류를 실질화할 수 있도록 교환근무제, 파견 등 인력교류 제도에 대한 조항을 마련하고 연수 기관의 범위를 대학, 관련연구기관, 산업체 등으로 확대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다.

- 시정 및 도시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유수한 연구기관들과 MOU를 체결하여 연구원들이 연수 및 교류 협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 지역내·외 대학 및 유사 정책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 사업을 확대·추진하여 전략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연구자 개인별로 진행되는 공동 연구 사업이나 수탁사업 등을 기획조정실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을 전략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 대학이나 지역의 유사 정책연구 기관과 공동 협력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원의 기초 연구능력을 강화하고, 향후의 중점 연구 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 지역 내 연구 및 기획관련 기관과 공동 연구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여 지역의 싱크탱크로서 대전발전연구원의 입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대전발전연구원 주도하에 '대전전략산업기획단',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대전첨단산업진흥재단' 등 유관 연구 및 기획기관과의 상호 연구보완 및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기관 협력이나 연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 공동 연구를 촉진할 수 있도록 공동연구에 대한 평가기준 보완 및 공동연구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 공동 협력 연구가 가능한 지역의 분야별 연구 인력에 대한 인력 풀을 구축하여 전문분아별 인력 DB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지역 내 대학 및 연구기관과 학술 DB의 공유 협력을 확대하고, 특히 정책 연구관련 자료를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국회도서관'과 자료 공유 협약을 맺을 필요가 있다.

◦ 산·학·연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지역의 싱크탱크로서 구심적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대전인적자원센터(RHRD)가 추진하고 있는 DB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연구자 인력풀을 전공분야별로 DB화하여 위촉연구원이나 공동연구자 등의 선정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핵심 분야', '취약 분야', '향후 연구 분야' 등 크게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 자문인력 풀을 구성한다.

- 지역현안 과제에 대한 세미나, 워크숍, 포럼 등 공동개최를 활성화하여 시민들의 인식과 참여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 소형 과제(500만원 이내)를 발주하여 지역 내 연구수요에 대한 상향식(bottom-up) 연구 촉진 및 장기기획 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기획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지역 현안 정책연구의 구심역할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전반적으로 연구의 정향(orientation)이 시정연구에서 지역연구로 변화하고 있다.

- 시민의 욕구에 기초하는 수요 지향적 연구 환경이 도래함에 따라 연구원의 정체성이 시정관련 연구기관이라는 이미지로부터 점차 지역관련 연구기관으로 변하고 있다.

- 이제 시정 현안에 대한 정책연구와 더불어 지역민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연구기획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확대되는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내 주체들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하다.

○ 발전방안

◦ 지역 현안 정책연구의 매개자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 지역의 시정 관련 기획 및 연구역량과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연구원은 지역 현안 연구를 효율적으로 매개하여 정책기획과 시정에 시민참여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 시민, 지역 의회, 지자체, 전문연구자, 시민단체, 노동단체, 지역기업 등과의 정책 개발 교감을 확대하여 지역연구의 허브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기본연구 및 정책연구 발굴에 시민, 시의회, 지자체, 기초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 기초 자치단체 및 시의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기초자치단체의 연구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이제까지 시정에 맞추어져 왔던 정책기획 및 연구방향을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고 정책현안에 대한 자문 및 연구지원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 지역 의회와 정책 정보·지식을 교류하여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연구 수요를 파악·반영하여 정책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 시정연구에 대한 시민과의 교감을 확대해야 한다.

-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 포럼, 정기 워크샵,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시민과 함께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다양한 지역수요를 반영한 연구기획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시민단체, 시의회, 언론기관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과 의사소통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현안에 대한 연구 사업을 공동기획할 필요가 있다.

◦ 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 개최 혹은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지역현안 과제를 발굴하거나 공동 연구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 홈페이지를 통한 상시 연구수요 파악 및 지역 내 관련 전문가와 기관에 연구수요 파악 설문조사를 상설화한다.

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사업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대전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구개발특구로서 향후 국제화의 정책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향후 대전의 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 대전발전연구원도 국제적 수준의 우수 연구인력을 확보하여 대전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연구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

- 국내 지역연구기관 가운데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활발한 해외 협력 교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인천발전연구원 등은 지자체의 특성과 연관된 분야에서 해외협력분야를 특화해 나가고 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해외 연구기관 협력사례>
* Cornwall Center for Metropolitan Studies at Rutgers,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 Southern California Association of Government (SCAG), USA
* Center for Transportation Research at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USA
*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Public and Environmental Affairs, USA
* University of Paris Sorbonne – Paris IV
* Beijing Municipal Institute of City Planning and Design, China

<인천발전연구원 사례>
* 연구과제 세부시행계획 수립·운영
* 기타 경미한 연구관련 사업보고

○ 발전방안

◦ 국제적인 협력사업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 세계과학도시연합(WTA) 등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해외협력사업과 관련해서 학술협력 분야의 공동기획,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에 대한 연구원의 참여 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 대전광역시의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유관연구기관과의 MOU 체결 등 협력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국제적인 공동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앞으로 연구원은 시정 현안 분야와 관련해서 해외연구자를 초정하여 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공동조사 및 공동연구개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공동 협력 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5. 고객서비스

고객지원시스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대전발전연구원의 기본과제 수요는 주로 실과에서 요구하는 과제와 부분적으로 연구원의 제안과제로 선정되고 있다.

- 연구결과물에 대한 만족도조사가 2006년도부터 실시되고는 있으나 조사항목 및 평가척도가 단편적이며 주관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 연구결과물이 보고서 형태나 파일형태로 생산되고 있으나, 발주처에 납부하거나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수준으로, 유관기관 및 일반시민에게 널리 공개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 수요에 부응한 연구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연구과제의 우선순위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 연구 성과물에 대한 만족도조사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아 연구결과의 실행가능성 및 완성도를 높이는 데 어려움이 있다.

- 연구결과물이 널리 배급·홍보되지 않아 그 활용도 및 효과성이 낮은 수준이다.

○ 발전방안

◦ 연구 과제에 대한 수요 조사 및 예측이 필요하다.

- 지역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연구과제에 대하여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산·학·연·관 기관 및 NGO단체 등을 대상으로 매년 연구 수요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 수요조사를 통해 과제의 중요성 및 우선순위를 판단함으로써 지역민의 실질적인 욕구에 부응하는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 연구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연구 과제를 수시로 자유롭게 제안 받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제안 받은 연구과제의 수행여부 등 조치결과를 공시할 필요가 있다.

◦ 연구결과물에 대한 발주처의 고객만족도 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 발주처의 연구용역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결과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최종연구결과물에 대한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연구수행자의 연구성과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 연구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만족도 조사의 피드백을 통해 용역발주처가 만족하는 심도 있고 완성도 높은 연구 성과물을 생산해야 한다.

◦ 연구결과물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지원 및 배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연구결과물을 특정 수요자 또는 일반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접근 또는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배포 및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인터넷 등을 활용한 온라인 정보지원시스템 구축하여 연구 결과물의 활용도와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연구결과물 공유 및 홍보 시스템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연구결과물은 연구원 홈페이지 자료실에 파일형태로 공개되어 있을 뿐, 연구결과 종료시 기자간담회, 발표회 등은 하지 않고 있다.

◦ 연구결과가 완료되었을 때 발주처에 납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보도자료 제공이나 언론기관 투고 또는 인터뷰는 방송사나 언론사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수행되고 있다.

◦ 연구원 정기간행물이 '대전발전포럼', '월간 대전경제' 등 2종에 그치고 있고, 연구원 홍보 브로셔가 발행되고 있으나, 대규모 세미나 행사에 배포하거나 유관기관 등에 정기 배포 등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연구원의 연구수행실적 및 각종 세미나, 워크샵, 포럼 등의 행사를 통해서 도출되는 정책적 함의들을 담아 전달함으로써 함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뉴스레터 등을 발간하지 않고 있다.

◦ 연구결과물이 연구원의 홈페이지에 파일형태로 구축되어 있으나, 검색시스템의 미비로 자료탐색에 어려움이 있다.

◦ 연구원 소장 자료의 탐색은 검색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자료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으므로 연구원의 연구결과물에 대한 검색 시스템 탑재가 요망된다.

◦ 연구원의 연구결과는 대부분 지역에서 쟁점이 되는 문제에 대한 대안들이 담겨 있으나, 연구원과 언론매체간 연계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아, 유용한 정책대안들이 공유되고 있지 않아 연구결과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 연구결과물의 생산, 연구원 주관 각종 세미나, 워크샵, 포럼 등의 행사를 통한 유용한 정책적 정보들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고 사장됨으로써, 연구결과물이나 각종 행사 개최의 의미가 부각되지 않고 있다.

○ 발전방안

◦ 연구원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연구 성과를 홍보할 수 있도록, 연구보고서의 DB화 및 연구자료 검색시스템을 구축해야할 필요가 있다.

- 도서검색 및 연구보고서의 폭넓고 편리한 활용을 위하여 자료를 DB화하고 검색프로그램을 개편하여 정보자료를 효율적 총체적으로 활

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보화한다.

- Web메일을 개편하여 메일 송수신시 편리한 인터페이스(화면) 제공 및 연구원외부에서도 사용이 가능토록 홈페이지 콘텐츠를 추가한다.

◦ 대중언론매체를 활용해서 연구결과물을 홍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체계화한다.

- 중앙 및 지역의 대중언론매체와 네트웍을 형성하여 연구결과물을 널리 홍보·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원과 대중언론매체간 홍보시스템을 정례화한다.

- 보도자료의 게제뿐만 아니라 연구원의 투고글 게제, 연구결과물 생산시 인터뷰 등을 상시화하도록 언론매체와 연계를 강화한다.

◦ 연구원에서 출간되는 발간물 및 브로셔 배포를 정기화하고, 배포처를 확대한다.

- 현재 발간되는「대전발전포럼」,「월간 대전경제」등 연구원 발간물과 연구원 홍보 브로셔를 정기적으로 배포하고, 배포처 또한 현행보다 확대함으로써 연구결과물 및 연구원 홍보 강화에 힘쓴다.

◦ 기본과제 등 연구결과에 대한 발표회를 개최한다.

- 기본과제 등 연구의 종결시에 관련기관 및 언론사, 주요 인사, 일반시민 등을 초빙하여 연구결과에 대한 발표회를 상시적으로 개최한다.

◦ 연구원의 뉴스레터를 발간한다.

- 연구원의 뉴스레터를 공격적으로 발간하여 연구의 성과물, 세미나, 워크샵, 포럼 등과 같은 각종 연구원 활동이나 행사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한다.

정보관리시스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대전발전연구원은 자료실의 도서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나 행정실 소속 직원 1명이 도서관리 업무와 사무처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 자료실에 상주인력이 없어, 확보된 자료의 체계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열람에 어려움이 많다.

◦ 아직 자료실의 도서대출 및 반납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 연구원은 공공성을 가진 연구기관으로서 소장자료에 대한 외부인의 접근성이 좋아야 되겠지만 아직 내부인에 대해서조차도 대출·반납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 연구원 발간물 및 외부 자료들이 자료실에 체계적으로 구비되는 시스템이 결여되어 있다.

- 각종 연구 및 학술 정기간행물 자료의 구입예산이 매우 부족하고, 특히 외국에서 발간되는 저명한 각종 자료의 구입수준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 대출·반납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소장자료의 유실 가능성이 높고, 귀중한 자료의 장기간 보존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 국내외에서 발간되는 각종 연구, 학술, 정기간행물의 확보처가 많지 않아서, 정세의 흐름 등을 제때 파악하기 어려워, 연구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 발전방안

◦ 자료실 운영·관리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 자료실 자료의 대출 및 반납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료의 유실을 방지

하고 장기간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확보된 자료에 대한 정확한 도서 분류 및 진열로 열람의 편의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 자료실에 상주하는 전임직원(아르바이트생도 가능)을 확보하여 자료실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연구원 발간물의 관리시스템 개선해야 한다.

- 연구원에서 발간되는 각종 발간물이 체계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현행 시스템을 보완・개선할 필요가 있다.

- 보고서 등 담당연구원별 생산 자료를 자료실에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연구・학술・정기 간행물 자료 확보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 국회도서관 및 국내 대학기관과 도서자료 열람협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 국내에서 생산되는 분야별 연구・학술・정기간행물 자료의 확보처를 확대하고 정기구독을 해야 한다.

- 외국에서 발간되는 저명한 연구・학술・정기간행물 등을 확보하여 정세의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앞서가는 지역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소장 자료에 대한 외부인의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

- 자료실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에 대한 대출이 연구원 내부인 뿐만 아니라 대전지역 거주 일반시민에게도 가능토록 자료 관리를 오프라인화해야 한다.

IV. 재정계획

기금조성

○ 현황

- 본원의 기금 조성은 2001년부터 시작하여 2007년 현재까지 9억원을 마련하는데 그치고 있다.

- 여타 시도연구원의 기금 조성과 비교해 볼 때 본원의 기금 현황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 문제점

- 전적으로 운영비 부족분을 시의 지원에 의존함으로써 기금의 확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미흡하였다.

-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통해서 연구의 내실화를 기하고, 연구원의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금의 조성이 필요하다.

○ 기금확보 방안

- 5개 기초단체, 지역 기업 등 다양한 기관들을 출연에 참여시켜 연구원의 운영기반을 확대한다.

- 출연방법

* 지방자치단체(대전광역시 및 구), 지역금융기관, 경제단체 및 기업으로부터 출연 모색 * 자체적으로는 용역수입액의 10% 기금적립 원칙 * 경비 절감액 적립

- 2011까지 조성할 목표기금을 100억원으로 정한다.

- 연도별 기금출연 목표액(단위: 백만원)

구분	현재	2007	2008	2009	2010	2011	비고
계	900	1,000	3,100	5,400	7,700	10,000	
신규출연		100	2,100	2,300	2,300	2,300	

예산절감

○ 현황 및 문제점

- 매년 수입 비중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출비용이 증대함으로써 전반적인 예산 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 절감방안

- 소비성, 낭비성 경비계상 최소화하고,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사용의 합리성을 도모한다.
-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투명한 회계 운영을 도모한다.
- 예산절감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하여 '제안제도'나 '인센티브제'로 활용한다.

〔부록〕

<표1> 연구사업 관련 평가지표(서울시) 및 개선방안

구분	세부 항목
◦ 연구사업 선정의 적절성	◦ 기본과제 중 기관목적 및 사업영역에 적합성
	◦ 대내외환경 및 사회적 요구에 부합성
◦ 연구사업 선정시스템 합리성	◦ 기본과제 선정을 위한 대내외 의견수렴
	◦ 유사중복연구 배제 노력 정도
	◦ 대형과제 또는 다년과제 선정여부
◦ 수탁사업의 적정성	◦ 기관의 목적에 부합성
	◦ 기관의 연구수행능력에 적합성
◦ 연구사업 관리규정 및 운영의 합리성	◦ 관리규정의 지속적 보완
	◦ 관리방법, 절차, 지원체계의 합리성
◦ 과제배분의 합리성	◦ 과제배분의 기준설정
	◦ 연구원의 수행능력 및 전공적합성 반영
◦ 자체연구평가시스템	◦ 평가시스템 운영의 공정성 및 합리성

<표2> 경력환산기준표(대구경북연구원)

구분	경력	환산율
연구직	1. 대학, 공무원,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기간	
	◦연구직과 동일하다고 인정시	100%
	◦연구직과 유사하다고 인정시	80%
	2. 석사·박사학위 과정 이수기간	
	◦학위 소지자	100%
	◦과정수료자	80%
	3. 기타 기관의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기간	
	◦요구직과 동일하다고 인정시	60%
	◦요구직과 유사하다고 인정시	50%
	4. 군 복무기간	100%
관리직	1. 공무원, 법인체, 관공서 공부에 등록된 단체의 정직원으로 근무한 시간	
	◦요구직과 동일하다고 인정시	100%
	◦요구직과 유사하다고 인정시	80%
	2. 위 1항의 고용직 또는 임시직에 종사한 기간	70%
	3. 군 복무기간	100%
기능직	1. 공무원, 법인체 등에 기능직으로 근무한 기간	
	◦요구직과 동일하다고 인정시	100%
	◦요구직과 유사하다고 인정시	80%
	2. 군복무 기간	100%

<표3-1> 주요연구원의 위임전결 사항(한국토연구원)

일련번호	업무내용		전결권자	
	항목	세부사항	연구책임자(팀장)	본부·실장
1	원내 외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 기타 회의	(1)회의개최계획 ◦경미한 사항 중 경비 - 50만원 이하 50만원 초과	 ○	 ○
		(2)세부추진계획 ◦중요한 사항 ◦경미한 사항	 ○	○
		(3)원외 강사초빙 ◦초빙방침결정 ◦강사료지급 의뢰	 ○	○
		(4)세부추진에 따른 일반사항	○	
2	Study Group 초빙강연		○	
3	타 기관과의 업무협조	(1)일반업무 협조사항 (2)연구관련 자료의 협조 ◦중요한 사항 ◦경미한 사항	○ ○	 ○
4	국내출장 승인 및 복명	(2)선임연구위원 (3)연구위원, 연구책임자, 팀장 (4)책임급이하	 ○	○ ○
5	해외출장 승인 및 복명	(3)출장여비 정산	○	
6	위촉직 고용	(2)고용요청 (3)승인사항에 대한 고용계약 및 발령		○ ○
	일용직 고용	(2)고용비용 청구	○	
7	소속직원의 업무분담	(1)연구팀 소속직원의 업무 (2)2개이상의 연구팀 소속직원의 업무 (3)지원부서 소속직원의 업무	○ ○	 ○
8	직원의 근무상황	(1)결근·외출 및 조퇴 등의 승인 중 ◦(선임)연구위원, 연구책임자, 팀장 ◦책임급이하 (2)근무상황부 관리	 ○	 ○ ○
9	소속직원의 시간외 근무명령		○	
11	업무한계의 조정	(2)연구(센터)실내팀 간 (3)지원부서팀 간 (4)지원부서팀 내	 ○	○ ○
12	경미한 사항의 이첩·회신·통지		○	
14	민원업무	(1)사실확인 및 제증명서 발급 (2)질의·건의·진정등에 대한 회신중 ◦중요한 사항 ◦경미한 사항	○ ○	 ○
15	원인행위 품의결재	(1)기구·비품·차량·장서의 구입 중 ◦50만원 이하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2)업무추진비 중 ◦50만원이하 - 연구부서 ◦수탁연구 ◦기본과제 - 행정지원부서	 ○ ○	 ○ ○ ○

※ 공통 (원장·부원장 제외)

<표3-2> 주요연구원의 전결위임현황(국토연구원)

일련번호	업무내용		전결권자	
	항목	세부사항	연구책임자(팀장)	본부·실(센터)장
15	원인행위 품의결재	⑶시설공사 수리 및 제조·인쇄 중		
		◦50만원 이하	○	
		◦50-300만원 이하		○
		⑷자산의 구입·매각 및 제조입찰 중		
		◦시가감정 의뢰		○
		◦입찰등록 결과보고		○
		◦입찰집행	○	
16	국제전화 및 전보사용 승인		○	
17	물품과 소모품의 청구 및 수리 의뢰		○	
18	소관물품의 운용		○	
19	각종대장의 정리 및 보관		○	
20	외부 공문수령, 처리	⑵경미한 사항	○	
21	세미나 및 각종회의 참석 (발표·토론 등)	⑵기타 직원 중		
		◦중요한 사항		○
		◦경미한 사항	○	
22	전도자금 및 가지급금 집행 결과보고	(1) 원안품의내 집행 중		
		◦본부·실(센터)장 이상 전결 건	○	
		(2) 변경 및 초과 집행		○
23	예산전용 의뢰	(1) 500만원 미만	○	
		(2) 500만원 이상		○

※ 공통 (원장·부원장 제외)

<표3-3> 주요연구원의 전결위임현황(국토연구원)

일련번호	업무내용		전결권자	
	항목	세부사항	연구책임자(팀장)	본부·실(센터)장
1	연구사업 운영	(1) 연구(센터)실 장·단기 계획수립		○
		(3) 실행연구계획(변경의뢰)서 제출		○
		(4) 연구과제 발굴회의 개최결과보고		○
2	연구심의회	(1) 외부전문가 인력 Pool 추천	○	
		(2) 연심회 결과보고서 제출	○	
3	연구 인력배치	(1) 연구팀내 업무분담	○	
		(2) 연구실내 연구팀별 인력편성 및 조정		○
4	연구관련 조사	(1) 조사실시계획 중		
		◦300만원 이하	○	
		◦3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2) 인쇄의뢰	○	
		(3) 조사결과 배포 승인요청		○
5	외부원고 집필 및 번역의뢰	(1) 외부원고 위탁 중		
		◦50만원 이하	○	
		◦10-100만원 이하		○
		(2) 원고료 지급의뢰	○	
6	외부전문가 활용	(1) 외부전문가 활용 계획서 제출		○
		(2) 원고청탁의뢰서 작성	○	
		(3) 외부전문가 활용결과보고서, 평가서	○	
7	전산처리 의뢰	(1) 원내의뢰 중		
		◦중요한 사항		○
		◦경미한 사항	○	
		(2) 원외의뢰 중		
		◦중요한 사항		○
		◦경미한 사항	○	
8	전산자료 복사	(1) 전산자료 복사 의뢰	○	
9	연구보고서 발간	(2) 인쇄의뢰	○	
10	수탁연구용역	(2) 과업지시서 및 내역 검토		○
11	위탁연구용역	(1) 위탁방침 결정 중		
		◦500만원 이하		○
		◦연구제안서 제출의뢰 및 평가		○
		(3) 하도급 승인요청	○	

※ 연구실 (원장·부원장제외)

<표4-1> 주요연구원의 전결위임현황(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일련번호	업무내용		전결권자	
	단위업무	세부사항	팀장	부·실장
1	기본운영계획	2. 시행계획 3. 시행예정표 운영관리		○ ○
2	학술행사	2.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3. 기타 세미나		○ ○
3	회의운영	3.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		○
4	복무	1. 근무상황관리 중 나.팀장 다.직원	 ○	 ○
5	업무	1. 업무분장 2. 업무인수인계 중 나.팀장 다.직원	○ ○	 ○
6	상벌	3. 포상후보자 추천		○
7	회계(품의)	1. 물품구매, 제조, 수리 중 가. 500만원 미만 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2. 공사, 용역 중 가. 500만원 미만 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4. 보수(제세금, 국민연금, 제보험) 5. 업무추진비, 부실운영비 6. 공공요금	 ○ ○ ○	 ○ ○ ○ ○
8	기관간 업무협조	2. 시행계획		○
9	국내·외 연수	2. 연수후보자 추천 5. 기타 세부시행 사항		○ ○

※ 공통 (원장 제외)

<표4-2> 주요연구원의 전결위임현황(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일련번호	업무내용		전결권자	
	단위업무	세부사항	팀장	부·실장
1	연구사업운영	2. 연구과제 세부시행계획 수립·운영		○
2	연구인력배치 조정 및 활용	2. 연구부서내 연구팀간 인력활용		○
3	연구보고	4. 기타 경미한 연구관련 사업보고		○
4	설문조사	2. 설문조사 실시		○
5	보고서	3. 편집 및 배포계획		○
6	위·수탁	전결권 없음		

※ 연구업무 (원장 제외)

<표5-1> 주요연구원 전결위임현황(경기개발연구원)

일련번호	업무내용		전결권자		
	단위업무	세부사항	팀장	부장	기조실장
1	연구사업운영	2. 연구과제에 대한 세부시행계획 수립·운영 5. 연구결과 대외기재 및 발표 7. 수탁과제 세부수행계획			○ ○ ○
2	연구직의 충원·조정 및 활용	4. 초빙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 채용건의 5. 위촉연구원, 연구조원 채용건의 6. 연구관련 일용잡급 채용		 ○	○ ○
3	연구보고	4. 기타 연구관련 사업 보고 6. 연구사업 진도파악 및 분석			○ ○
4	연구위원회	2. 위원회 기본운영 중 가. 회의소집 3.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			 ○ ○
5	연구관련조사	1. 조사 기본계획 및 방침 결정 2. 조사실시		 ○	○
6	복무	1. 근무상황 관리 중 나. 부장 다. 연구직 및 팀장 라. 직원 2. 국내출장 및 복명 중 나. 부장 다. 연구직 및 팀장 라. 직원 4. 휴가 중 나. 부장 다. 연구직 및 팀장 라. 직원	 ○ ○ ○	 ○ ○ ○ ○	 ○ ○ ○
7	학술행사(세미나)등 개최	3. 세부추진계획의 수립·시행 4. 기타		 ○	○
8	중장기계획 및 방침의 수립시행	전결권 없음			
9	업무	1. 직원의 업무분장 지정(보직자 제외) 2. 업무 인계인수 중 나. 부장 및 센터장 다. 연구직 및 팀장 라. 직원 3. 대외기관 보고자료 등 제출 중 나. 경미한 사항	 ○ 	 ○ 	○ ○ ○
10	국제협력사업	3. 계획에 따른 시행			○
11	상벌	1. 포상후보자 추천 중 나. 부장 및 센터장 다. 연구직 및 팀장 라. 직원	 ○	 ○ 	 ○
12	원인행위(품의)	1. 제조 중 가. 100만원 이하(팀장) 나.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다. 2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2. 매입 중 가. 100만원 이하(팀장) 나.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다. 2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 	 ○ ○ 	 ○ ○

※ 기획조정실 및 연구부 (부원장, 이사장, 원장 제외)

<표5-2> 주요연구원 전결위임현황(경기개발연구원)

일련번호	업무내용		전결권자		
	단위업무	세부사항	팀장	부장	기조실장
1	제안제도	2.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			○
2	자료관리	1. 자료분류 및 등록	○		
		2. 열람 및 대출	○		
		4. 반납독촉장 발부	○		
		5. 장서점검 실시		○	
		6. 분실자료의 변상	○		
3	간행물기증·교환	1. 간행물 기증·교환(수시분)	○		
		3. 간행물 판매관리			○
		5. 간행물 번호 및 ISBN부여	○		
		6. 간행물 관련 타기관과의 협조			○
4	출판 및 편집	2. 보고서 표준모델 통보 및 관리			○
		3. 간행물 발간 중			
		나. 원고집필 의뢰 계획 수립			○
5	각종 소회의	1. 소회의 위원 임면			○
		2. 소회의 기본운영			
		가. 회의소집 및 결과보고			○
		나. 편집회의 소집 및 결과보고			○
		3.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			○

※ 기획조정실 및 연구부 (부원장, 이사장, 원장 제외)

<표6-1> 주요연구원 전결위임현황(대전발전연구원)

일련번호	업무내용		전결권자
	단위업무	세부사항	연구실장
1	연구사업운영	- 전결권 없음	
2	중장기계획 및 방침의 수립시행	4. 결정에 대한 점검	○
3	연구과제별 연구사업수행	- 전결권 없음	
4	연구과제편성 및 조정	1. 과제편성 및 조정을 위한 사전협의 2. 결정사항에 대한 이행	○ ○
5	위탁용역연구	3. 위탁연구관리	○
6	연구보고	3. 기타 연구관련 사업보고	○
7	연구관련조사	2. 조사실시	○
8	연구보고서	3. 편집 및 배포계획 4. 연구평가 결과 및 자문결과 보완	○ ○
9	세미나 개최 등 운영	3.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4. 행사 개최에 따른 일반사항	○ ○
10	학술행사(세미나), 협의, 간담회	4. 일반적인사항	
11	평가 및 심사분석	2. 과제별 사업추진 평가 중 나. 연구사업 진도 파악 분석	○
12	연구직원의 대외활동	- 전결권 없음	
13	연구자문위원회 운영	3.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14	연구원위촉	- 전결권 없음	
15	출판 및 편집	보고서 표준모델 통보 및 관리	○
16	간행물 발행, 기증 및 교환	3. 간행물 배부(정기분) 4. 간행물판매 5. 간행물 관련 타기관과의 협조	○ ○ ○

※ 연구부 (이사장, 원장 제외)